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책임연구원	이동연
공동연구원	김미소
	백기영
	유사원
	이규석
	정진새
	천정환
보조연구원	김선민
	박다인
	(가나다순)

## 1장 개요

---

1-1. 연구의 취지와 배경	11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 구성과 진행과정	21
1-4. 기대 효과	23

## 2장 지원체계 환경 분석

---

2-1. 재단의 현 지원체계	26
2-2. 문화예술의 환경 분석	30
2-3. 국가문화정책의 환경 변화	32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2-4. 국가문화정책의 환경 변화 - 〈새 예술정책〉	38
2-5.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환경 분석	44

## 3장 지원체계의 방향

---

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정의	51
3-2. 키워드 분석	57
3-3. 지원 방향을 위한 고려사항	59
3-4. 지원의 3대 방향	62

## 4장 지원체계의 내용

---

4-1. 지원의 대상	65
4-2. 지원의 방법	72
4-3. 행정체계 개선	77
4-4. 지원의 절차와 과정	88
4-5. 정산체계의 혁신	97

## 5장 영역별 지원체계 개선

---

5-1. 문학 분야	111
5-2. 무용 분야	123
5-3. 전통예술 분야	132
5-4. 연극 분야	142
5-5. 음악 분야	153
5-6. 시각예술 분야	162
5-7. 다원·융합예술 분야	179
5-8. 청년 분야	186

# 1장 개요



## 1-1. 연구의 취지와 배경

---

### ■ 연구의 취지

- 서울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지역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의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최근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중앙과 광역 문화재단과 기초단체 문화재단과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예술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는 광역 문화재단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에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를 통하여 지난 5년간 재단의 예술지원의 기본 틀과 방법, 계획을 수행하였음. 이제 앞으로 5년의 지원체계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패러다임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개선안을 제시.
-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민선 7기 출범으로 인한 서울시의 문화정책의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재단의 지원체계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

### ■ 연구의 배경

#### 1) 문화예술계의 사건이 주는 교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으로 예술계 현장은 예술지원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
-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지원이 특정 이념적 통치 성향과 정치적 편견에 종속되어 검열과 배제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예술지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했음. 블랙리스트로 인한 지원 배제는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큰 상처를 남겼으며, 지원기관에 대한 예술가들의 뿌리 깊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었음.

- 한편 미투운동은 예술계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성적 불평등에 의한 권력관계와 위계에 의한 창작생태계의 착취관계의 나쁜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간 예술지원제도와 관행에서 성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상기시킴.
- 미투운동으로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여성예술계의 폭로와 고발이 해당 예술계에서 큰 위력을 행사하던 남성 예술인들의 처벌과 함께 예술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으로 이어짐.
-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은 불가피하게 국가 및 지역의 예술지원기관에 지원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임.

## 2) 국가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변화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 수립이 진행되었음. 20여 차례의 준비단 회의, 6회의 분과별 현장토론회, 4회의 문체부 장관 및 실국 관계자 워크숍, 13회의 찾아가는 문화정책토론회 등 총 70여 회에 걸친 행사를 통해 만든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는 국가문화정책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는 2004년에 만들어진 ‘창의한국’ 이래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갖춘 국가문화정책 보고서로서, 문화예술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위계와 권력에 의한 예술계 젠더 폭력을 고발하는 미투운동 이후에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당.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는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문화취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함.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함.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산업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음. 그것은 사회 혁신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함.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와 더불어 <새 예술정책: 예술이 있는 삶, 사람이 있는 문화> 보고서는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 이후 국가예술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 <새 예술정책>은 10개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별로 예술정책의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① 총괄분과 ② 예술지원체계분과 ③ 예술표현의자유분과 ④ 예술인복지분과 ⑤ 문학분과 ⑥ 공연예술분과 ⑦ 시각예술분과 ⑧ 문화예술교육분과 ⑨ 예술시장지원분과 ⑩ 장애인예술분과. 각 분과는 현장예술인, 학계·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정부 정책으로서의 책임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담당 사무관도 해당 분과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음.
- <새 예술정책>은 총 4개의 분야 8개의 추진과제를 골자로 예술정책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음.

〈새 예술정책 지원 범주와 추진과제〉

지원 범주	추진과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구현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 예술 가치 창출과 발현에 중점을 둔 창작지원을 하겠습니다 ·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를 펴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하겠습니다

### 3) 예술과 예술인의 사회문화적 배경

- 근대 예술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인구 감소로 예술대학이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 예술인의 취업난의 고충과 대학 평가에 따른 예술전공학과의 폐지 및 통폐합 등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인해 예술대학이 극심한 경제체제로 내몰림.
- 예술인 역시 기초예술의 위기로 예술창작 환경 및 작품활동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예술의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청년예술인의 창작 기본 물적 토대의 부재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
-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협하는 생활환경이 위기를 맞게 되어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정책〉에 예술인 복지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안들이 포함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예술인 금고”,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등 예술인 사회보장과 생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기술문화 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예술장르들이

해체되고 다른 장르들이 새롭게 부상하며, 서로 다른 장르들이 융합하는 시대가 오면서 예술인의 정의와 예술인 직업 분류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작품의 완결성과 작가의 고유성을 중시하는 근대 예술시대에서 독자와 관객의 참여와 기술문화 혁신의 영향이 지배적인 탈근대적 예술시대로 진입하면서 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예술창작의 기술과 방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음. 예술과 기술의 융합, 문화와 과학의 통섭 경향은 예술의 존재와 생산 방식에 패러다임 전환을 몰고 왔음.
- 따라서 예술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술창작의 위기, 예술인 지위의 변화, 기술문화 환경과 예술생산방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4) 지역문화분권의 실질적 실현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는 9개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 의제는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임. 지역문화분권은 크게 보아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지원과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유지·보존하는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어디에서 살더라도 지켜져야 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지역사회가 개인들의 다양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개인과 공동체가 일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생활이라는 장소와 공간에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할과 기능을 나누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권력과 권한, 자원을 나누며 이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분권과 자치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은 보충성의 원리,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기반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다.

- 지역문화정책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보충하는 협치에 의해 실현 가능함. 형식적인 자문 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로 협치를 제도화하고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을 혁신해야 함.
- 또한 지역문화자산의 고유성, 문화적 향유의 보편성을 구현하기 위해 이를 실행할 문화 전문 인력의 확보, 지원 기구 및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 지역문화분권은 단지 지역문화 격차 해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 격차 해소도 중요한 실천과제이지만, 문화분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이 제대로 살아나야 함.
- 〈지역문화분권 실현〉의 의제에 담긴 구체적인 대표과제는  
1)지역문화 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3)지역문화 거점기관의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4)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에 서울은 어떤 점에선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지만, 서울 역시 중앙정부의 국가문화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문화재단의 위상과 지역문화분권의 중앙-지역의 관계 설정에서 하나의 모델로 존재하는 문화재단의 특성에 맞는 지역분권의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지역문화 지원체계의 실질적인 방향과 실천과제들이 수립될 수 있음.

## 1-2. 연구의 목적

### 1) 재단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도출

- 블랙리스트, 미투운동, 사회문화 환경 변화 등 문화예술정책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방향 도출.
- 2013년 지원체계의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을 도출.

201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혁신 10대 과제	① 창작지원사업 예산의 확대
	② 재단 글로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 지원사업 마련
	③ 특성화 공모 지원사업 확대
	④ 창작 수월성-시민문화 활성화 연계 지원
	⑤ 예술창작공간과의 연계 방안 구축
	⑥ 예술창작자-매개자-소비자 유통구조의 플랫폼 구축 강화
	⑦ 전문예술창작지원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선
	⑧ 예술가에게 복합정보서비스 제공
	⑨ 예술지원조직체계의 강화
	⑩ 예술지원체계를 위한 문화 거버넌스체계 강화

- 2013년 지원체계 10대 과제는 주로 주요 개선과제 중심으로 도출하였음. 창작지원 예산의 규모, 특성화 지원, 창작공간, 지원의 선순환 구조, 조직, 거버넌스 강화 등이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
- 이러한 지원체계 혁신과제들은 지난 5년간 재단의 지원체계 개선에 적용되어왔음.
- 그러나 현재의 지원체계는 블랙리스트, 미투운동, 청년예술인 위기, 예술인의 위상과 지위 변화 등의 조건들을 고려할 때, 예술인 중심의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예술인들의 세대별 성별 고려를 위한 지원의 차별화,

지원과정에 대한 예술인 친화적 서비스의 강화, 예술인의 창작을 위한 공간, 장비, 홍보 등의 환경 지원, 예술인의 지원 심사, 평가, 정산제도의 혁신 등 예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혁신안 마련이 필요.

### 2) 재단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 기존 재단 예술지원체계 및 사업 진단을 통한 중장기 예술지원 전략 수립.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이 필요.
- 2013년 보고서에 담긴 지원체계 개선안에 대한 환경 분석은 다음과 같음.

주요 환경 분석	현안 분석
기초예술창작 생태계의 위기	예술 창작-유통의 위기 예술창작의 종다양성이 부족 예술가 창작 환경의 어려움 기초예술의 지원 부재
예술창작 생태계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창작 세대의 출현 예술 생산-소비 플랫폼의 다변화 예술의 무한 접속
예술가-예술창작-수용자의 생태적 전환	시장과 자본의 논리를 벗어나는 예술가 생태계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물을 다양한 수용자에게 예술장르와 예술 표현양식의 종다양성
기술화, 디지털화에 따른 융합예술창작 활성화	창작행위와 작품의 존재론 변화 과학기술과 예술의 결합 예술장르의 탈-경계 예술의 타 분야 융합 증대

- 2013년 보고서의 거시 환경 분석은 지금도 유용한 분석으로 파악됨.  
다만 이러한 환경 분석은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 분석 진단이 부족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 분석을 포함해 새롭게 부상하는 거시적인 예술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더 내실 있게 분석하여 실제로 재단에 필요한 중장기 지원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재단 지원사업의 실질적 개선 및 적용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2020년 적용 기준, 재단의 예술지원 추진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 및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무엇보다도 블랙리스트, 미투 등으로 고통을 겪은 예술인들의 창작 권리가 보장되고, 예술인의 지위가 확대되며,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함.
- 재단의 신임대표 선임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개선의 주요 과제들을 담아야 하고, 재단의 사옥 이전 및 창작공간의 재편, 새로운 지원사업들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함.
- 지원체계에 있어 특히 창작지원본부의 조직 강화 및 개편, 지원 정보 홍보, 심사 평가 및 정산 등의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을 고려.
- 재단 지원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 정립에 있어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
- 지원의 대상과 방법, 내용, 평가 등등 지원제도 개선에 있어 실제로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개선안을 제시.

## 1-3. 연구 구성과 진행과정

---

###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19~2023년  
(※ 201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후속 연구)
- 공간적 범위: 서울
- 대상적 범위: 예술 정책 및 제도에 따른 서울 예술지원 영역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범위
  - 위에 해당하는 예술지원 분야(장르) 영역

### 2) 연구 진행과정

#### ① 문헌 연구

- [중앙]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새 예술정책>
- [서울] <서울 예술인 플랜>
- [해외]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 연구
- [기타] 국내외 예술정책 중장기 계획 보고서 수집·분석
- [기타] 예술정책의 각 분야(장르)별로 수립된 중장기 보고서 수집·분석
- [기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관련 보고서 수집·분석

#### ② 연구진 세미나

- 정기적으로 연구진 세미나 개최. 연구의 진행과정, 연구 주요 내용 검토, 현장인터뷰 내용 분석, 집필 역할 분담 등

### ③ 전문가 현장워크숍

- 문학, 국악, 연극공연예술, 시각, 전통, 무용, 청년 등 분야별로 현장전문가들과 집담회 진행

### ④ 지원체계 토론회

-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 전에 현장예술인들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 3) 연구진 구성

구분		직책
책임연구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체부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
공동연구원	김미소	DMZ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사무국장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유사원	케이아츠크리에이티브 연구기획실장
	이규석	전 서울문화재단 본부장
	정진새	연극연출가
보조연구원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전문사 수료
	김선민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전문사 졸업

## 1-4. 기대 효과

- 문화정책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 서울시 민선 7기와 문재인 정부 출범, 재단의 새 대표이사 선임을 계기로 재단의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가문화정책과 지방분권에 기반한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비전을 제시.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운동 이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문화정책의 이해를 바탕으로 광역 문화재단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원체계의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새로운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재단 지원체계의 새로운 혁신 모델 제시
  - 예술청 설립, 본부 사옥 이전, 창작공간의 운영 혁신 등 재단의 지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지원체계를 수립.
  - 재단이 안고 있는 지원체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원의 전체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법들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지원의 혁신 모델을 제시.
  - 지원의 목적, 목표, 방법, 대상, 정산과 평가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
- 현장예술인에게 친화적인 지원체계 수립
  - 현장예술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원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매뉴얼을 제공하여 정책보고서의 성격보다는 예술인 친화적인 보고서 작성.
  - 현장예술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개선하길 원하는 분야들을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 본 보고서의 주요 지원체계의 내용과 개선과제들을 현장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단의 지원사업 소개 매뉴얼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2장 지원체계 환경 분석



## 2-1. 재단의 현 지원체계

### 1) 재단 출범 이후 예술지원체계의 변천과정 (2004~2018년)

연도	지원조직	범위	내용	
2004~2006	문예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창작기반조성	예술창작 활성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유망예술프로그램 집중육성 젊은예술가지원사업
				문예지원공모사업 청소년문화벤처단 활동 지원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시민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대학로 연습실 운영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교육(예술경영) 지원
				정기공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특성화지원	젊은예술가지원 자치구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공연예술공모창작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2007~2009	예술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정기공모	시민문예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젊은예술가지원 자치구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공연예술공모창작지원
			특성화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예술창작 지원사업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시민문화 진흥사업	시민문화예술지원 - 문화배달서비스(~11년) - 시민예술활동 지원 - 시민축제 지원 - 자치구 문화공간(~10년) - 자치구 네트워크(~10년) - 문화공간활성화지원(11년~)
2010~2011	예술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지원시스템	예술창작 지원사업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2012~2014	예술지원팀 ↓ 예술지원팀 (전문예술) + 시민문화팀 (시민문화)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지원시스템	전문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14~16년)(시범) 유망예술육성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서울문화기업 육성지원(~13년) 예술축제콘텐츠교류지원
				특성화 지원
				시민문화지원
2015~2016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전문예술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13년) 시민축제지원(~13년) 서울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13년)
				지원시스템
				예술지원체계 개선
2017~2018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14~16년)(시범) 유망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16년~)
				지원시스템
				예술지원체계 개선
2019~2020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2021~2022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2023~2024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연도	지원조직	범위	내용	
2004~2006	문예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창작기반조성	예술창작 활성화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유망예술프로그램 집중육성 젊은예술가지원사업
				문예지원공모사업 청소년문화벤처단 활동 지원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시민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대학로 연습실 운영 문화예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홍보마케팅교육(예술경영) 지원
				정기공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특성화지원	젊은예술가지원 자치구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공연예술공모창작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2007~2009	예술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정기공모	시민문예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젊은예술가지원 자치구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 공연예술공모창작지원
			특성화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예술창작 지원사업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시민문화 진흥사업	시민문화예술지원 - 문화배달서비스(~11년) - 시민예술활동 지원 - 시민축제 지원 - 자치구 문화공간(~10년) - 자치구 네트워크(~10년) - 문화공간활성화지원(11년~)
2010~2011	예술지원팀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지원시스템	예술창작 지원사업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유망 예술가 인큐베이팅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창작활성화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육성 - 예술축제 콘텐츠 교류
2012~2014	예술지원팀 ↓ 예술지원팀 (전문예술) + 시민문화팀 (시민문화)	· 예술창작지원 · 시민문화지원 · 지원시스템	전문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14~16년)(시범) 유망예술육성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 서울문화기업 육성지원(~13년) 예술축제콘텐츠교류지원
				특성화 지원
				시민문화지원
2015~2016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전문예술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13년) 시민축제지원(~13년) 서울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13년)
				지원시스템
				예술지원체계 개선
2017~2018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2019~2020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2021~2022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2023~2024	창작지원팀 (총괄) + 창작공간 (운영)	· 예술창작지원 · 지원시스템	기성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예술창작지원-예술가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18년~) 청년예술공간지원 청년예술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18년 타부서 이관)
				지원시스템

## 2) 현 지원체계 (2018년 기준)

태동기 → 예술계 진입

청년예술지원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지원시스템으로,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최초 예술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데뷔 (설립) 10년 이하 예술인(단체)	창작준비형: 2백만 원 (시상금) 창작발표형: 5백만 원~1천5백만 원	7,000,000	1 차	266	1 차	1,519,200
				2 차	190	2 차	1,162,918
				합 계	456	합 계	2,682,118
서울청년 예술단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창작활동비(월 70만 원/인), 창작지원금 (최대 1천5백만 원/단체), 간접 지원		58		2,400,600	
청년예술 공간지원	청년예술 창작발표, 기획사업 운영이 가능한 민간 공연/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	자체기획형: 공간운영비 및 사업운영비 (2천만 원~5천만 원) 발표공간제공형: 공간운영비 (2천만 원 이내)		35		863,000	

진입 → 성장기

유망예술지원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망 예술인(단체)을 선정하여 다년간(2년) 집중 지원

—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	데뷔(설립)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	창작지원금, 연습/발표공간, 멘토링, 사진/영상 촬영 등 (7백만 원~2천만 원) ※2년간 지원	500,000	28	400,000

성장기 → 안정기

예술창작지원 - 예술작품지원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발표 지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서울에서 예술활동을 계획한 예술단체·예술가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백만 원~5천만 원)	5,048,000	334	4,623,900

예술창작지원 - 예술가지원					
문학/시각예술 작품집 및 문화예술 연구서적 발간 지원으로 창작·기록물 축적과 예술계 발전에 기여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국내 신춘문에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중 개인 창작집이 없는 작가	작품발간비 (1천만 원) ※시상금 방식으로 지급	543,100	30	300,000
문학 첫 책 발간지원	개인 창작집이 있는 작가			20	200,000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발간 지원	첫 개인전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작가		78,400	7	70,000
예술연구 서적발간 지원	서울에 거주하며, 지원대상 장르에 대한 연구·활동을 정리하여 서적을 발간하고자 하는 개인		78,500	8	80,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안정된 창작 역량을 갖춘 단체와 공연장의 협력을 통해 창작품을 보급·확산					
—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 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 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공연제작비, 단체운영비 (8천만 원~ 1억5천만 원)	2,396,000	25	2,277,000
기타					
창작작업실·연습실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및 창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으로 운영·사용하는 민간 예술단체 또는 2인 이상 예술인	1개소당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300,000	66	248,703
장애인예술창작활성화지원					
순수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경력의 제한 없이 안정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작품을 지원					
—	지원대상	지원 내용	사업 예산 (천원)	지원 건수	지원금 예산 (천원)
—	서울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	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백만 원~ 1천5백만 원)	178,220	20	165,500

## 2-2. 문화예술의 환경 분석

### 1) 블랙리스트 사태의 의미와 교훈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은 우리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
- 이 두 사건은 2000년 이후 곤경에 처했던 예술현장에 투영된 두 개의 상반된 얼굴로 평가할 수 있음.
-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예술인에게 가한 가장 저열한 형태의 물리적·상징적 폭력의 징표라면, 미투는 진보-보수의 이념을 떠나 권력을 가진 예술인이 그에게 종속된 예술인에게 가한 젠더 폭력에 맞선 저항.
-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이념의 잣대로 예술가를 배제한 국가의 검열장치로서, 국가 최고 통치자의 지시로 시작해 문화 관료들의 검토를 거쳐 현장 지원 실무자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예술인을 지원체계에서 총체적으로 배제한 사건임.
- 블랙리스트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팔길이 원칙’(arm length principle)을 무시하고, ‘모든 지원을 정치적 이념의 기준에 따라 통제 및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지원을 볼모로 예술인과 창작물을 검열한 사건임.
-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인을 내부에서만 알고 있는 공공프로세스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정치적 표현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배제와 구별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예술검열로 회귀한 억압적인 문화정책이며, 역설적이게도 예술인들의 저항으로 그 억압적인 문화정책의 종말을 선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 권고안 및 백서 발간과 제도 개선안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 문화예술계 현장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지원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

-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은 어떠한 정치적·이념적 기준으로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지원의 공공성,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완전한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 2) 미투(#Me Too)운동의 의미와 교훈

- 우리 시대 예술과 예술인, 예술활동의 위기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종결되지 않고, 예술계의 오랜 악습으로 지속되어온 ‘젠더 폭력’을 통해 폭발되었음.
- 미투운동은 예술의 이중적인 위기와 파국, 즉 블랙리스트라는 정치적 파국과 젠더 폭력이라는 성차별적 파국을 통해 심화되었음.
- 미투운동은 예술계에 오랫동안 체화된 젠더 폭력에 맞선 저항의 연대이면서, 블랙리스트라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예술계 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예술계 밖으로 끌어올린 문화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미투운동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촉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미투운동은 블랙리스트에 맞선 예술행동 안에 감추어진, 혹은 은폐된 젠더 폭력의 폐부를 드러내는 예술운동으로 평가해야 함.
- 미투운동은 우리 안의 블랙리스트를 환기시킨 사건으로서, 우리 안의 젠더 폭력의 자명성을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이념의 논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허위의식을 폭로한 것임.
- 따라서 예술지원체계에서 젠더의 문제, 지원에 있어 젠더 평등의 고려, 지원자에 대한 젠더 폭력 여부 심의, 지원 콘텐츠의 젠더 감수성, 심사과정에서의 젠더 관점 고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원체계 매뉴얼에 담아야 함.



## 2-3. 국가문화정책의 환경 변화

###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1)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비전체계도

구분		내용
3대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방향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9대 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확대 성평등문화 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지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 2)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 국가문화정책의

##### 패러다임 전환

- 첫 번째, 문화비전은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전환해야 함. 치열한 입시 경쟁, 경제 불균형, 지역 격차,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문화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즐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나아가야 함.
- 두 번째, 문화비전은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나아가야 함. 국가문화정책은 이제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문화예술인의 창작 자율성, 지원 독립성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문화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문화비전은 또한 과거 청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문화정책, 즉 인구 감소,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평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간파하고 그에 적합한 중장기 문화정책을 제시해야 함.

- 세 번째, 문화비전은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바뀌어야 함. 무엇보다도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문화현장을 바로잡는 문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공연예술현장에서 벌어지는 위계권력과 계약 불이행, 혹은 불공정 계약 등으로 현장 기층 예술인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문화비전은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해야 함.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문화분권의 실현에서 지역문화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 지역문화분권은 문화균형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해야 함.
- 다섯 번째,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함.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 기록. OECD 회원국 35개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음.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될 정도임.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자유시간을 늘려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여섯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를 견지해야 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자동화에 따른 인간 노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짐.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인간 본연의 노동과 생산력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 미래의 문화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비전은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의 문화로 나아가야 함. 문화예술계에서 일고 있는 미투운동은 오랫동안 자행되었지만 침묵했던 남성 위계권력에 의한 일상적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짐. 따라서 미투운동은 문화예술계 안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젠더 감수성의 고려와 젠더 주류화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 젠더 폭력의 구조가 바뀌기를 희망. 문화비전은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젠더 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함.

### 3) <문화비전2030>의 가치

- <문화비전2030>은 이러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설정.
-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함. 자율성은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고, 다양한 문화취향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
- 다양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함.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를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지향함.

-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산업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음. 그것은 사회 혁신에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말함. 문화의 창의성은 교육, 복지, 도시 재생,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 <문화비전2030>의 방향

- 이러한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라는 3대 방향을 설정.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문화적 권리를 중시. 국가문화정책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는 개인이 스스로 문화적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개인이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율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은 계층, 세대, 성차, 지역 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함. 문화다양성의 원리는 차이와 공존의 가치를 중시함. 문화예술자원이 한쪽 집단에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통문화유산을 중시하되 현재와 공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 특히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은 문화다양성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
-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은 문화가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만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창의성은 단지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만드는 원천만이 아니라 문화가 교육,

환경, 복지, 통일과 같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됨.

#### 5) <문화비전2030>의 9대 의제

- 이러한 문화비전의 3대 가치와 방향을 기초로 <문화비전2030>은 대표적으로 9대 의제를 설정함. 3대 방향에 따른 9대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개인의 자율성 보장’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대표과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것.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시에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첫걸음 문화카드’ 지원과 집 가까운 동네에서 문화여가를 즐기는 ‘문화놀이터’ 사업, 그리고 생활예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나도 예술가’ 프로그램을 도입.
-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에는 가칭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실시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
- ‘성평등문화 실현’은 성적 위계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 문화예술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②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서 제시하는 의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임.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태 조사, 사라져가는 언어와 전통문화의 보호, 그리고 관광과 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는 과제들이 제시. 또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행위 해소, 공정한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

- 지역문화분권을 현실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50개 선정, 매력적인 지역관광도시 선정, 협치를 위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

##### ③ ‘사회의 창의성 확산’

- 마지막으로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융합적인 문화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예술교육과 문화 R&D 확대 등을 제시.
- 미래와 통일을 위한 문화협력을 확대하고자 ‘남북문화 교류협정 체결’, ‘남북문화 동질성 회복 프로젝트’ 등을, 문화가 사회 혁신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도록 일상과 삶이 통합되는 문화지대 조성, 창의적인 혁신학교 설립, 창의적 문화 일자리 확대 등을 제시.

## 2-4. 국가문화정책의 환경 변화 - 〈새 예술정책〉

### 1) 〈새 예술정책 비전체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4대 목표	8대 전략과제	25개 실행과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행정 혁신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계 성평등 실현으로 예술활동의 다양성 증진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기관별 역할 재편을 통한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성 ·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국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 환경 조성	예술 가치 창출과 발전에 중점을 둔 창작지원을 하겠습니다	· 예술현장의 자생성을 강화하는 창작지원 · 경력 단계별, 창작 과정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공공예술자원과 민간 예술계의 상생협력 강화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예술인 복지를 펴겠습니다	·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예술인 생활지원 확대 · 예술인 직업 환경 개선 및 직업 활동 다양화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 향유 역량 강화 · 수요창출형 관객 지원제도 도입 ·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기반 조성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소수자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소수자 예술공간 조성 및 교류 · 소수자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의 예술시장 환경 조성 · 활력 있는 예술시장을 위한 혁신 역량 지원 · 예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예술의 미래 가치를 키워겠습니다	· 청년세대를 위한 예술지원 강화 · 진화하는 기술의 예술 분야 활용 지원 확대 ·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공간 조성 · 국제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

### 2) 예술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sup>1</sup> 주요 내용

#### ① 배경 및 목적

○ 사상 초유의 블랙리스트 사태 발생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행정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해 지원을 배제하고 차별한 ‘범죄행위’. 52) \*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위원회로 전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믿을 수 없는 예술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야기.

- 국민과 예술가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예술행정체계를 재구성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제기됨.

○ 다양한 (국공립) 예술기관의 등장과 변화하는 예술생태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조화 필요.

- 2005년 이후 여러 문화예술지원기관이 탄생.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5), 예술경영지원센터(2006),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09),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2) 등.

- 지역 또한 16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 탄생. \* 2018년 현재 14개 광역 문화재단과 7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 53)

- 예술계 내에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협동조합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법인 및 조직 형성.

-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하는 생태에 맞춘 예술지원체계의 재구조화 필요.

1) 이 부분은 〈새 예술정책〉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9) 발간자료 104-7쪽 내용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 ② 현황 및 문제점

###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행정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행정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 정부 예술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함.
-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에서는 2018년 4월 18일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54) 52) 서울고등법원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블랙리스트 범죄자들에 대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나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볼 때 위헌, 위법, 부당행위에 해당함”이라고 판결함(2018.1.23. 선고/2017노2425/2017노2424 병합,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p.17 재인용). 53)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사 현황(<http://koculture.or.kr/agency.php>)
- 발표된 권고안은 △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문화가치 확산 및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칭) ‘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가칭) 문화 권리와 표현의 자유 선언, △ 문체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 △ (가칭)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함.
- 더불어 법제도 차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 55)

- 이에 제시된 권고안을 기초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행정체계 구축 필요.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예술지원체계 재구조화의 핵심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이 제기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한 심의위원 배제 및 사업지원 배제 발생, 그 스스로 블랙리스트 실행체로서 역할. 5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된 것은 예술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관료적 관리체계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대다수 문화예술지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종속되어 일방적인 기관 운영에 따라 정책, 심의, 집행 등의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지원사업의 폐기, 심의위원 풀 통제, 지원 절차 개입, 심사 결과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조사 결과 제시. 5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1월 8일 혁신TF를 구성하고 자체 혁신안 마련.
  - 예술지원체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갖는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되 강한 공적 책임과 국민(예술계)에 의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체계 개편 필요.
- ###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인 복지 등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예술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필요.

- 특히 예술인 복지와 생활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저작권을 포함한 예술노동과 일자리 창출 등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③ 추진 방향

- 문체부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예술행정의 방향을 전환
  - 지원체계 내 상시적인 예술인 참여체계 형성.
  - 예술인 주도 참여형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 폐쇄적·위계적 지원체계에서 독립적·자율적 지원체계로 전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예술기관 및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
  - 국민 참여 기반 관리체계 형성, 행정 중심에서 자율적 지원체계로 전환.
- 효율성 중심에서 자율과 분권, 협치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협력체계로 전환
  - 각 기관과 지역을 묶는 협치 플랫폼 조성.
  - 기관과 지역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형성.

### ④ 주요 추진과제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 재구성.
  -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지원체계의 운용을 지원하는 행정부처로서 역할.
- 예술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
  - 연 1,000억 원 규모의 예술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예술지원체계 형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 제고
  - 예술지원체계 중심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국민 중심 관리시스템으로 향상적 혁신 기반 마련
- 국민이 참여하는 예술지원체계 형성
  - 다양한 국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예술지원체계 형성
  - 국민 및 예술인 참여 시스템으로 예술지원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



## 2-5.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환경 분석

### 1) 서울 예술인 플랜

[서울 예술인 희망플랜 HOPES]

5개 과제	주요 과제
주거 안정 【Housing】	· 예술인 주거 안정: 임대주택 대상 내 예술인 포함, 빈집, 협동조합 주택 등 Social Housing을 통한 예술가 거주 문제 해결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 제공 【Opportunity】	· 공공분야 및 기관 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사업 내 예술가 일자리 제공 · 사회예술교육 등 공공분야 예술사업 확대 · 예술인 창업을 촉진하는 Start-Up 정책 수행 · 예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직업박람회 및 '청년예술가 희망캠프' 개최
예술활동을 촉진하는 환경과 시스템 【Promotion】	· 청년예술가를 위한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제도' 운영 · (청년)예술가 및 작품의 유통을 위한 공공 차원의 유통시장 조성 · 예술가의 창작활동 집중을 돕는 창작비용제(artist fee) 운영 · 다양한 유형의 창작공간 조성 및 예술가가 운영하는 작업공간 운영 지원
긴급구호 【Emergency】	· 위기의 예술가를 위한 긴급구호자금 운영 · 예술활동 밀집지역 내 예술인 숙소 건립·운영 · 예술가 부당노동행위 모니터링 운영(공공노무사, 로스쿨 등과 결합한 예술가 노동환경 모니터링) · 다양한 유형의 컨설팅 제공
지속가능한 예술인 활동을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구축 【Substantiality】	· 각 분야 예술지원 퍼실리테이터 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예술 노무사, 변호사 등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예술병원을 활용한 치료서비스 제공 등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예술 후원시스템 구축

### 2) 민선 7기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플랜 분석

서울시 시정계획의 구조: '더 깊은 변화위원회'

- 민선 7기 박원순 시장의 시정계획은 5개 분과에 걸쳐 총 25개의 핵심과제와 183개의 일반과제로 구분. 문화는 당초에 안전분과에 속해 있었으나, 문화분과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미래분과로 이동. 민선 7기의 4개년 시정계획의 분야별 핵심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시정 목표	분야	과제명	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6개>	산업경제	4차 산업혁명의 메카,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	미래
		관광·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청년	청년미래투자자금 조성	
	노동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취약노동자 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4개>	문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일상
	안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 관리 강화	
	환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교통	보행친화도시 서울 본격 추진	
		지역 간 조화롭고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5개>	복지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치	사람
	건강	지역 건강 포괄 케어를 위한 보건 의료체계 강화	
	돌봄	돌봄특별시, 「돌봄 SOS센터」 설치	
	교육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비강남권 학교 우선 지원	
	경제민주화	서울페이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5개>	도시 계획·산업 재생	정부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도시 재생 확대	도시
		지역 특성 기반 서울 균형 발전 종합정책 추진	
	주택·주거 재생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24만 호 공급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 개량 및 공급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5개>	사회적 경제	공공자산의 사회적 경제 활용 활성화로 지역경제 동력 회복	민주주의
	성평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협치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자치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남북 교류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견인	
	지역상생	서울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 3) 문화정책 분야 핵심과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 문화 분야의 대표적인 핵심과제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최근 케이팝의 글로벌 열풍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음악 경쟁력은 비단 케이팝뿐 아니라 클래식, 국악 및 장르음악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지만, 제대로 된 공공지원정책이 부족.
- 특히 서울시는 다양한 음악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잠재력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민선 7기에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하였던 서울아레나 및 서울시향 전용 홀 건립 사업 및 국악센터 설립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음악 거점공간 지원, 다양한 계절별 음악축제 지원과 같은 세부과제를 통해서 글로벌 음악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
- 음악 창작·공연 인프라 확충 계기로 글로벌 음악도시로의 성장가능성 확대.
-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서울아레나를 주축으로 창동 일대를 음악도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음악시장으로 가는 다양한 기회 제공.
- 서울은 케이팝의 글로벌 열풍과 문화관광과의 연계, 홍대 인디음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서울아레나 플랜의 가시화로 인해 매력적인 글로벌 음악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잠재력을 보유.
- 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뮤직시티 등 새로운 음악 중심 공간 조성에 따른 다양한 지원정책 필요.
-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음.

〈글로벌 음악도시 조성 핵심 전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 음악자원 중심 장르별 기반 조성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거버넌스 구성·운영 (6개분과, 35명)</li> <li>· 음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통합정책 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아레나(케이팝)</li> <li>·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대중음악)</li> <li>·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복원</li> <li>· 서울 클래식 전용 홀 건립</li> <li>· 서울국악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글로벌 뮤직엑스포’ 개최</li> <li>·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 국내외 홍보</li> <li>· 국제적 음악 행사 유치</li> <li>·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발</li> </ul>

### 4) 문화 분야 일반과제: 문화본부 사업 중심

-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이외에 문화 분야의 주요 일반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공약 내용	소관 부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플랜 수립 · 서울아레나 건립,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조성, 서울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 등 음악 장르별 기반 조성 · (가칭) 서울 글로벌 뮤직엑스포 개최 등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화	문화정책과
청년예술인 무한기회 프로젝트 · 최초예술지원 확대, 청년예술단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장기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조성 · 문화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조성·운영	문화예술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 조성 및 확대 · 서울시 권역별로 「(가칭)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운영 · 지역 밀착형 공간 조성, 활동지원 등 일상 속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질적 성장 도모 · “시민을 객석에서 무대로”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축제 지속적 확산	문화정책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



공약 내용	소관 부서
박물관도시 서울 조성 · 다양한 박물관·미술관을 2022년까지 13개소 확충 ·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 활성화	박물관과
지식문화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 혁신 · 서울시 5개 권역별 각 1개관씩 분관 건립 · 전 생애에 걸친 지식정보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하는 시민전문가 양성 · 차별 없는 서비스를 위한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서울도서관
역사도시 서울의 가치 확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 한양도성, 한성백제유적, 용산기지, 성균관과 문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역사 문화재과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 축제 수행, 민간 축제 간접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추진기관 확보 · 「서울특별시 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 서울 개최 우수 축제 선정 및 유형화를 통해 관광자원화 지원	문화예술과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서울 조성 · 선도적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례 개발 및 확산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공공디자인 시민인식 제고 및 '유니버설 디자인 리빙랩' 구축·운영	디자인정책 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공연 추진 · '서울-평양 아트비엔날레' 추진 · 서울-평양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추진	문화정책과

## 3장 지원체계의 방향



### 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정의

---

####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는 정치적인 독립과 자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젠더 평등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킴.
- 미투운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젠더의 관점에서만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정치적 권리의 중층적인 구성 원리들을 문화적 담론으로 문제 제기한 것임.
-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미투운동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예술운동의 국면들은 지난 10년간 예술인 복지담론의 국면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못했던 관점, 즉 예술인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는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였음.
- 2000년대 후반 일어났던 예술인 복지담론과 최근의 블랙리스트 저항-미투운동 담론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문제를 복지의 수준을 넘어서 정체성과 권리의 수준으로 인식했다는 점.
- 현재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을 계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예술계 현장에서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러한 법의 취지와 방향이 예술인들의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

#### 2)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 예술인의 지위와 관련해 1980년 10월 유네스코는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통해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음.

예술인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캐슬린 김, 『예술법』, 학고재, 2013, 37쪽에서 재인용)

- 유네스코의 예술인 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예술인이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고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이 정의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예술인의 일반적 정의에 해당함. 창조적 행위와 미적인 표현행위, 그리고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예술인으로 정의.
- 둘째,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삶 속에서 창작을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하는 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로 프리랜서 예술인들로 정의할 수 있음. 특별한 것은 프리랜서 예술인을 어떤 규정이나 기준에 의해 정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술인의 정의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정의. 예술인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창작물이 관객들을 즐겁게 하고 한 시대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예술인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 네 번째 정의는 예술인을 정의하는 가장 폭넓은 정의에 해당. 이 정의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예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창작 역량이 높은 수준에 있어 예술가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술인의 네 번째 정의는 제도화된 예술인이 아니라 자발적·자율적·자생적 요청에 의한 호혜적 정의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주체적 역량을 가장 강조한 것임.

### 3)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경제적 조건에 대한 논의도 중요.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예술인의 지위는 추상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음.
-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은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예술인의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중요함.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술노동의 의미, 예술활동의 가치, 예술인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

첫째, 예술노동의 정의는 예술지원체계의 철학과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예술인에게 ‘노동’은 ‘창작’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고, ‘창작’ 역시 ‘노동’과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음.

- 창작은 노동의 한 형태이면서도 노동 일반으로 환원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노동’으로서 창작은 창작의 행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창작자의 육체적·정신적 투여의 총량과 질을 객관화하는 것을 의미.
- 반대로 ‘창작’으로서 노동은 노동의 특수한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로서 육체적·정신적 노동 일반을 매개한 창조적 활동.

- 따라서 ‘예술노동’은 노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노동의 특수한 행위로서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예술은 노동의 가치를 재현할 뿐 아니라 노동의 특수한 행위로 독립적·자율적·미적 가치를 갖게 됨.

둘째, 인간의 활동으로서 예술노동의 가치임. 예술노동은 예술의 노동 특이성의 가치와 인간의 삶에 있는 감성적 활동으로서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됨.

- 예술노동의 실천적 관점이 예술복지와 예술행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 “즐겁고 충족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노동”이란 개념은 예술노동이 감성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
- 감성적 활동으로서 예술노동은 창작행위의 권리를 의미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예술노동은 노동 행위의 사회적 보장 체계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
-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은 예술노동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음.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은 “예술인은 가난하다”, “예술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어렵다”라는 현상적인 담론에서 설명될 수 없음.
- 예술인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담론은 예술인의 궁핍한 현실과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술인의 노동은 어떤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이성에 따른 경제적 권리와 보상은 어떻게 구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어야 함.

셋째, 기본소득으로서 예술인 복지. 2016년 1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예술인 희망플랜〉 보고서를 보면, 청년예술인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3점, 생활 만족도는 2.60점으로 조사. 또한 자신의 총수입에서 예술활동으로 버는 수입은 총 30%, 총수입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가 86%로 조사.

- 예술인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오히려 예술인은 창작을 위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 어떤 청년예술인은 자신의 삶과 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안정적인 직장고 고수입의 레슨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계속 창작, 제작, 기획 일을 선택.
-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하여,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음.
- 서울시는 예술인의 주거를 안정되게 만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할 예정. 창작지원 이전에 생계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가난한 예술가에게 일상적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존재를 높이는 창작의 권리.

#### 4)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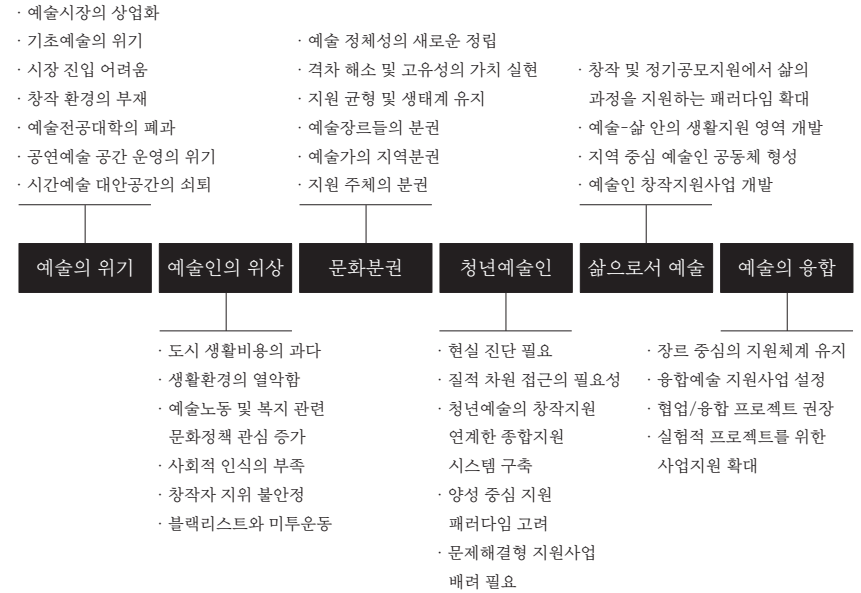
-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는 매우 까다로운 개념. 그래서 예술인의 권리 중에서 ‘정치적 권리’는 어떤 관계와 특이성을 갖는가, 권리로서 ‘정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정치적 권리에서 ‘정치적’은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필요.
- 예술인의 권리는 문화적·경제적·정치적 권리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 먼저 문화적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작품을 창작하고 비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 예술인의 경제적 권리는 창작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로 집약될 수 있음.
- 창작행위로서의 권리와 창작물로서의 권리는 예술가의 정의에

있어 ‘생활’과 ‘인정’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

예술가의 권리가 예술창작의 과정과 결과 모두 보장받는 것이라면,  
그 권리는 예술가들의 생활 속에서 마땅하게 인정받아야 함.

- ‘창작’과 ‘생활’이라는 것은 예술가들의 권리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 생활은 창작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창작의 환경, 혹은 조건. 예술가에게 창작 역시 생활과 분리될 수 없음. 창작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정치적 이념과 사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창작활동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러한 입장을 드러냄에 있어서 검열받지 않고 지원에서 배제받지 않을 권리 역시 예술인의 중요한 정치적 권리 중의 하나임.
- 예술인의 정치적 권리 역시 예술지원체계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임. 즉 정치적 권리에 대한 창작의 표현이 지원체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지원이 이러한 정치적 창작 권리를 통제하거나 배제하지 말아야 함.

## 3-2. 키워드 분석



키워드	내용
예술의 위기	예술시장의 상업화, 양극화로 인한 기초예술의 위기
	신진예술인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 기성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의 부재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술전공대학의 폐과 및 교육 경쟁력 약화
	온라인 문화 환경의 도래로 출판문학시장의 위기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공연예술공간 운영의 위기
	시각예술 대안공간의 쇠퇴로 전시공간 생태계의 위기
예술인의 위상	도시 생활비용의 과다로 예술인의 생활환경의 열악함 가중
	예술노동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화정책의 관심 증가
	예술인의 존재와 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
	4차 산업혁명과 기술문화의 혁신으로 근대적 의미의 작가와 창작자의 지위가 불안정
	다원적·융합적·기획적 의미의 예술인의 정체성 변화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을 계기로 예술인의 지위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키워드	내용
문화분권	문화분권의 관점에서 보는 서울의 예술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
	격차 해소와 고유성의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화분권을 접근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는 지원의 균형과 생태계 유지의 관점에서 접근
	고유성의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는 예술장르의 특성과 지리적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청년 예술인	예술장르의 분권, 예술가의 지역분권, 지원 주체의 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
	청년예술인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
	청년예술지원에 대한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질적인 접근이 필요
	청년예술의 창작지원과 연계 가능한 생활지원, 활동지원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기획자, 매개자 양성 중심의 청년예술가 지원 패러다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
삶으로서 예술	교육기관,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제해결형 지원사업의 배려가 필요
	창작지원과 정기공모지원의 패러다임에서 예술인의 삶의 과정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의 확대가 필요
	예술-삶 안에서 생활, 공간, 공유,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 영역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술의 융합	지역 중심의 예술인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창작지원사업을 개발
	장르 중심의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다원예술, 융합예술 분야도 새로운 지원사업 범주로 설정
	예술가들 간의 협업과 융합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지원사업을 개발
	예술+기술, 과학+문화의 융합, 통섭의 실험적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예술의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지원사업을 고려

### 3-3. 지원 방향을 위한 고려사항

- 1) 서울문화재단의 고유한 지원 철학과 가치가 드러나는 지원체계 구성
  -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술인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서울문화재단의 고유한 지원 철학은 대표적인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 기초를 이끌고 가야 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함.
  - 재단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비전과 목표, 미션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성찰이 요구됨.
  -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서울문화재단만의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체계 안을 제시해야 함.
- 2) 지원 주체로서 재단의 위상과 지위를 제고
  - 예술인들의 직접 지원 주체 기관으로서 지원체계를 개선할 시에 재단의 공공성, 자율성, 독립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특히 재단과 서울시의 관계에 있어 주무 부서인 '문화본부'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문화본부와 재단이 상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함.
  - 서울시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재단의 고유한 예술인 지원체계사업과 많이 충돌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
  -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안이 실행될 경우, 재단이 주도적으로 서울시 본부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을 대표하는 재단으로서 서울시 내 기초자치단체 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3) 예술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개선으로 가야 함.
- 현장예술인들을 지원할 때 평소 느끼는 어려운 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예술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담론으로 구성되어야 함.
- 현장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지원체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현장예술인과의 협치를 통한 지원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현장예술인들 중에서 장르 분야에서 요구하거나 개선해야 할 지원사업들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장르 분야의 예술가들의 타당한 요구들을 수렴해야 함.

### 4) 새로운 국가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 조응

- 중앙정부의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와 <새 예술정책>의 정책 기조와 가치 방향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울문화재단에 적합한 지원체계 모델을 제시.
-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 구조의 조정을 파악하여 예술인 일자리, 예술인 복지, 예술인의 창의적 사회 참여와 관련된 지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
- 특히 <새 예술정책>에서 제시하는 국가 지원체계 방향과 추진과제들을 숙지하여 광역 문화재단에 연계 반영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

### 5) “분권의 분권” 실현

- 광역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분권의 주체이면서 대상인 이중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지원체계 개선을 마련해야 함.
-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재단의 분권을 고려해야 함.
- “분권의 분권” 정책은 재단과 중앙정부, 재단과 서울시, 재단과 기초자치단체 재단, 재단과 예술가, 재단 내 지원조직 간의 분권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분권의 분권” 정책의 핵심은 지원체계 구성원들의 상호 자율성을 존중하고, 협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

### 6) 지원체계의 변화를 체감하는 보고서 작성

- 이번 보고서는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개선안을 내놓아야 함.
- 지원 예산의 규모, 지원체계 조직의 강화, 지원공모 절차의 간소화, 지원 분야의 혁신, 지원 심사제도의 혁신, 지원 평가와 환류체계의 개선 등 지원체계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20년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보고서가 지원 매뉴얼 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쉽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

### 3-4. 지원의 3대 방향



Mission
<b>방향 1 서울형 지원체계 모델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나라도움 정산시스템” 개선 등 지원제도 간소화, 합리적·효율적 운영방안</li> <li>· 심사, 평가, 정산 등 서울문화재단만의 독립적인 체계 구축</li> <li>· “서울스탠다드”(Seoul Standard) 지원 모델 제시</li> <li>· 다년도 지원사업 확대, 협업과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 기반의 예술인 공동체 형성 지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의 범주를 개발·확대</li> <li>· 자원, 공간, 기술의 연계와 환류, 네트워크 중심의 지원체계 대안 제시</li> <li>· 예술인의 창작지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와 합리적 배분</li> <li>· 청년예술인 예산 활용, 정기공모 예산 확대, 창작공간 활용 간접 지원 확대</li> <li>· 지원사업 담당 조직 인력의 단계적 확대</li> </ul>
<b>방향 2 예술인 당사자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당사자주의 원칙을 반영</li> <li>· 예술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예술인 친화형 지원체계 마련</li> <li>· 지원과정과 평가, 정보서비스의 패스트트랙 추진</li> </ul>
<b>방향 3 예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 혁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랙리스트를 극복하고, 미투운동을 성찰하는 예술지원체계</li> <li>· 문화예술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예술지원제도 구축</li> <li>· 국가문화예술정책에서 예술지원체계의 새로운 비전 반영</li> <li>· 예술창작의 변화, 예술인의 삶, 기술문화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 영역 개발</li> <li>· 다원적이고 융합적인 예술 창작 분야의 지원 확대</li> </ul>

## 4장 지원체계의 내용





## 4-1. 지원의 대상

---

### 1) 추진 배경

#### ① 문화예술 창작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의 조정

- 21세기 들어 예술과 예술인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술창작의 근대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음.
- 예술창작의 근대적 패러다임은 문학, 연극, 무용, 음악 등 전통적인 예술장르의 완결성을 강조하고, 작가 1인의 창작의 위대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창작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문화와 기술,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술창작의 융합화, 탈장르화, 탈경계화의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예술창작지원의 대상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그 범주가 정해져 있음.
- 따라서 달라진 문화예술 창작 환경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지원대상의 영역과 범주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지원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대상을 세분화

- 대부분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자의 연령별, 역량별, 성별, 신체별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의 장르에 기반한 지원의 범주와 영역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틀을 만들고 있음.
- 지원대상에 있어 지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기성예술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청년예술가의 창작 조건의 열악함과 마찬가지로 노령의 예술가 역시 창작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자신들의 창작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대상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대상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함.

#### ③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원대상의 범주의 새로운 설정

-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은 크게 변경되지 않고 진행되었으나, 달라진 문화예술 환경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주와 영역을 새롭게 정하는 데 있어 일부 문화예술정책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만으로 정하지 말고 현장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장르별 현장예술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 만큼 현장에서 요청하는 제안들이 향후 지원사업의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예술인들의 새로운 지원사업들이 기존의 사업 대상의 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추진.

#### ④ 지원사업 대상의 체계적 조정

- 현재 재단의 지원사업의 대상들은 문화예술 환경의 위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결정된 사업이 많아서 사업의 범주 사이의 체계성과 적절성이 부족함.
- 지원사업의 대상을 새로운 원칙과 방향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서로 비슷한 취지와 내용으로 중복되는 것들을 조정하고,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들을 재구성해야 함.

#### 2) 지원 현황

현재 서울문화재단 2019년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예술작품지원		
분과	세부사업	대상
연극	—	2019년 서울에서 공연예술활동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연극	공연장상주단체 (공연예술단체)	연극 분야(아동극, 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 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연주 전문 단체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 전통공연 단체
유망예술지원		
연극	NEWStage	최소 3개 이상의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의 연출가 최소 2개 이상의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의 극작가
무용	dot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 연한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
다원, 전통, 음악	MAP	
시각	99℃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

(다음 페이지에 계속)

예술가지원		
문학	첫 책, 창작집 발간 지원	첫 책: 국내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중 개인 창작집이 없는 작가 창작집: 개인 창작집이 있는 작가
시각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첫 개인전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작가
문학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예술가 및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 경영		
청년예술지원		
연극	최초예술지원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예술인 ※ 단, 데뷔 10년 이하 단기 경력 보유 예술인도 참여 가능 ※ 문학은 39세 이하 미등단자에 한해 참여 가능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 3) 개선과제

#### ① 지원사업 영역의 체계 개선

-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영역은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기존 지원 영역을 새로운 창작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문학, 연극, 무용, 음악, 시각,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별 지원 영역들을 재조정.
-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안에서도 장르 내 다양한 세부 영역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 내 다양한 세부 영역의 범주들을 사전에 정리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반영하여야 함.

- 장르별 영역들을 독립된 영역으로 분과화하지 말고,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례 예시: 지원대상의 범주 체계도〉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서사창작	문학	시, 소설
	시나리오	연극, 뮤지컬, 오페라, 게임 등
	비평	시, 소설, 연극, 게임 등
	디지털 서사창작	사이버문학, 인터넷소설
공연예술	클래식	기악, 성악, 오케스트라, 실내악, 오페라 등
	국악	기악, 국악 앙상블, 연희창작, 창극, 정가, 판소리 등
	무용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연극	창작연극, 마임, 드라마투르기
	뮤지컬	창작뮤지컬
시각예술	조형	회화, 판화, 조각, 유리, 공예 등
	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공디자인, 상호작용 디자인
	멀티미디어	사진, 비디오아트, 설치 등
융합예술	미디어아트	상호작용적 미디어아트, 비디오오디오 아트, 센서 아트, 미디어파사드 등
	네트워크 퍼포먼스	실시간 온라인 퍼포먼스, 로봇 퍼포먼스, 센서 퍼포먼스
	첨단 테크놀로지	가상현실, 인공지능, 로봇틱스 아트

#### ② 지원사업의 대상 체계 개선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인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예술가지원”, “청년예술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의 층위들이 서로 변별성과 층위가 맞지 않아 새로운 구조적 체계

정비가 필요.

- 지원사업의 대상을 예술작품창작지원과 예술가지원으로 이원화하여 체계를 간단하게 정비.
- 예술작품창작지원은 위의 예술장르의 새로운 영역 범주를 통해서 세부 지원산업을 정비.
- 예술가지원은 예술가들의 직접적인 창작지원이 아닌 예술가들의 생활 및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

#### ③ 생애주기별 예술가지원

- 청년예술인, 장년예술인, 노령예술인 등 생애주기별로 특성화하여 지원사업을 새롭게 구성.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 생애주기별 예술가지원사업 안으로 포함.
- 생애주기별 예술가지원사업은 예술장르별로 별도로 지원받지 말고, 특별한 지원 범주로 지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 ④ 특수 지원 대상자 지정 사업

- 예술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전공 재학생, 경력 단절 여성예술인, 장애예술인, 서울시 거주 외국인 예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상 사업 범주를 구성.
- 이 사업 역시 장르별로 구분해서 지원받지 않고 앞서 언급한 예술전공 재학생, 경력 단절 여성예술인, 장애예술인, 서울시 거주 외국인 예술인 등 영역별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 4) 기대 효과

- 예술지원사업의 대상을 조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사업 구조를 마련.

-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원사업의 대상을 조정하여 예술창작에 기여.
- 예술인들의 현장 요구를 수렴하는 지원대상을 마련하여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사업체계를 수립.

## 4-2. 지원의 방법

### 1) 추진 배경

#### ① 지원 방법의 다양화, 입체화의 필요성

- 현재 대부분 문화재단의 창작지원사업은 공모 시기, 규모, 내용이 유사하고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고 진행되어왔음.
- 지원 방법이 현장예술가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다양화, 입체화될 필요가 있음.

#### ② 공모 시기에 대한 선택의 기회 확대

- 서울문화재단 역시 창작지원사업은 공모 시기가 정기공모사업 중심으로 1회에 한정되어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 시기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늦게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원사업의 공모 시기를 다원화하여 정기공모사업뿐 아니라 수시사업 등을 신설하여 지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함.
- 공모 시 지원 기간도 단년도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다년도 지원(2~3년)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지원자의 신청서류 작성과 재단의 서류 심사도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음.

#### ③ 지원사업의 규모를 다양화

-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규모는 대부분 ‘소액다건’을 지향하여 지원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제작비용의 과다로 예술인들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됨.
- 지원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사업 선정자의 수를 일부 축소하며, 지원사업의 건당 예산 규모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

#### ④ 지원사업 내용의 다원화

- 재단의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이 대부분이나 현장예술인들은 재정지원뿐 아니라 창작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 컨설팅 및 홍보서비스도 필요로 함.
- 재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 선정자들에게 장소, 시설, 기획, 홍보 분야에도 다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여야 함.

### 2) 세부 신청 방법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2019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예술작품지원			
분과	세부사업	시스템	제출 및 기타
연극	—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www.ncas.or.kr * 신청서 → ncas * 세부사업계획서 → 서식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 ncas 업로드	공연 대본(pdf)
무용			영상(avi, wmv) 3분
음악			음원 또는 영상 3분 이내
전통			
다원			포트폴리오(지정 양식, ppt 10 이하, 동영상, 음원 포함)
시각			포트폴리오(hwp, ppt)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연극	공연장상주단체 (공연예술단체)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www.ncas.or.kr * 신청서 → ncas * 세부사업계획서 → 서식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 ncas 업로드  * 공연장, 공연예술 단체 간 협약  * 공연장 등록증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협약체결 완료 후 신청
무용			
음악			
전통			

유망예술지원			
연극	NEWStage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www.ncas.or.kr * 신청서 → ncas * 세부사업계획서 → 서식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ncas 업로드	연출가: 공연 대본(pdf) / 극작가: 기발표작 대본(2편 이상의 장막희곡, pdf)
무용	dot		최근 3년간 활동 증빙자료 (hwp, doc, ppt, pdf) / 동영상 3분 이내
다원, 전통, 음악	MAP		최근 3년간 활동 증빙자료 (hwp, doc, ppt, pdf) / 동영상: 3분 / 음원: mp3, wav
시각	99℃		—
예술가지원			
문학	문학 첫 책 발간지원,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www.ncas.or.kr * 신청서 → ncas	작품원고 hwp 10MB 이하 시, 시조, 동시: 10편 소설: 단편 2편, 중/장편 1편 택일 동화: 단편 2편, 장편 1편 택일 희곡, 평론: 2편
시각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발간계획서: 작품집 개요 및 주요 작품 이미지 PPT 20매 이내. 동영상 캡처 이미지 또는 URL
문학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연구 및 출판계획서: 목차 및 연구 내용 요약, 출판 계획, 연구 이력 및 최근 3년간 주요 활동 실적 연구서적으로 출간할 내용에 대한 가제본 원고 PDF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경영			
청년예술지원			
연극	최초예술지원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www.ncas.or.kr * 신청서 → ncas 활동계획서: ncas 업로드	다년(2년) 지원 시 계획서는 2년 계획 수립하되, 시스템 지원 신청액은 1차 연도 지원액 기재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활동계획서 및 작품원고 시, 시조, 동시: 3편 소설, 동화, 평론, 희곡, 기타: 1편

### 3) 개선과제

#### ① 공모 시기의 조정과 복수화

- 정기공모사업의 공모 시기를 지원 해당 연도의 전해 10월부터 공고.
- 선정 심사는 전해 연도 12월에 완료 및 1월에 선정 결과 발표  
일정으로 진행.
- 또한 일부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시기를 해당 연도 상반기  
(4월 지원, 6월 선정)에 진행.
- 일부 계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지원제도를 도입.

#### ② 신청서류와 절차의 간소화

-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간소화.
- 지원사업의 온라인 입력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세한 정보 설명으로  
지원신청자들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서류 및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2020년도 일부 시범사업 도입,  
2021년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준비.

#### ③ 지원 규모의 다양화

- 지원사업의 규모를 지원 금액별로 차등 분류하여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지원사업 규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하여 상한선은 1억 이상,  
하한선은 최소 1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에 세부 지원  
규모를 분류하고 이 분류에 대한 지원사업의 해당 비율을 사전에  
설정.

#### ④ 지원 내용의 다원화

- 지원 시에 예산지원만이 아니라 공간지원, 시설지원, 컨설팅지원, 홍보지원 등의 범주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지원 내용들을 공지.
- 예산의 전체 규모가 작더라도 공간, 시설, 홍보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 지원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체제를 강화.
- 지원사업의 내용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예산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극장지원사업, 시설지원사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

#### ⑤ 지원사업 담당 인력의 확충

- 지원사업 공모 시기의 복수화, 절차의 간소화, 규모의 확대, 내용의 다원화와 같은 실제 지원사업의 방법들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전담 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 현재 예술지원팀 체제를 세분화하여 예술지원행정지원팀, 예술지원서비스팀, 예술지원인력관리팀으로 확대 운영을 고려.

#### 4) 기대 효과

- 예술지원 방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현장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지원의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 예술지원 방법의 간소화, 다양화, 다원화를 통해서 지원서비스체제를 강화.
- 예술지원의 시기, 규모를 조정하여 한 시기에 자원사업 업무가 몰리는 것을 방지.

### 4-3. 행정체계 개선

#### 1) 추진 배경

##### ① 행정체계의 작동 원리

- ‘창작지원’ 분야는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고유사업으로, 현장예술가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예술기관 본연의 임무에 합당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음.
- ‘창작지원’ 분야는 국·시비 개념의 공공지원금을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환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창작지원’은 “준비 - 공모 - 심의 - 교부 - 평가/모니터링 - 정산 - 환류 - 종료”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적인 지원 성격의 업무가 부가됨.
- ‘창작지원’ 분야에 대한 정책이 제도로 발현되고 현장에서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를 진행하는 실무적인 체계와 운영시스템을 ‘행정체계’로 이해할 수 있음. 행정체계는 행정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예술가와 재단을 비롯하여 해당 예산을 의결, 처리하는 시(市), 중앙정부의 활동을 모두 아우르고 있음.
- 현재 창작지원의 사업별 단계별 업무는 현재 재단 내의 예술기획팀(구 창작지원팀)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창작공간별로 분화되었던 장르 중심의 창작지원제도가 2019년부터 예술기획팀의 업무로 통합됨. 2015년 이전에는 창작지원팀이 통합된 방식으로 창작지원 분야의 행정업무를 담당함.

##### ② 행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 창작지원을 통한 예술가의 활동은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운영시스템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함.
- 창작지원제도는 현장의 개선 요청과 재단의 소통의지가 반영되어



점점 고도화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옴. 그러나 그러한 개선과 보완에 따라 제도 자체의 완결성은 높아진 반면, 그에 따르는 운영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음.

- 지원제도 고도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하고 미세한 행정업무들이 과도하게 발생함. 따라서 이미 제도 안에 과다한 업무량이 내재되어 있음. 현재의 고도화된 창작지원제도에서 요구되는 업무량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매해 반복적인 업무 과부하로 인한 동일한 문제 발생.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행정지원 인력의 피로도 증가 및 창작지원 업무의 기피화 발생.
- 창작지원공모에 응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해지고 그 수요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기존 행정체계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현장의 요청에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함. 실제로 예술가들이 요구하는 지점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실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도 여겨짐.
- 창작지원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사안은 이에 걸맞은 행정체계의 개선과 보완임. 이는 재단의 정체성과 미션, 조직문화, 구성원의 참여의지 등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2) 현황

### ① 단계별로 발생하는 과다한 업무

- 예술지원사업 추진 단계별 업무는 현재 개별팀 단위에서 수행하기에는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담당자의 노동강도와 업무 피로도가 높음.
- 단계별로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이 발휘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단순반복적인 업무가 가중되는 단계가 있음. 연중 내내 성격이 다른 과다한 업무가 요구됨. 대표적으로, 공모 혹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생하는 ‘민원처리’ 업무, 행정심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수정’ 업무,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순기입’ 업무, 정산 및 성과 보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산처리’ 업무가 그러함.

- 단계별로 세부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식이 요구됨(단계 축소, 인력 지원, 전문성 강화, 대리 업무 등 복합적인 솔루션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임. 따라서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상급자 단계의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함).
- ② 창작지원제도의 시간성의 한계와 오류
  - 예술가의 활동주기와 행정가의 활동주기의 차이: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기관을 경유해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보고하는 1년 단위의 행정주기와 시간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개별 예술가의 창작주기가 다를 수밖에 없음. 그러나 예술가의 창작활동이 공공지원에 따른 업무의 표준에 맞춰짐에 따라 상호 간의 어려움이 발생함.
  - 단년도 설계에 따른 시간 부족: 해당 연도 사업 실행에 필요한 절대시간의 부족. 3월 이후에 시작해서 12월 전에 끝내야 하는 구조. 12개월 치의 분량을 8개월 치로 처리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 발생. 실제로 설계 및 환류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12개월+@)의 업무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1년 이하의 업무 기간으로 충족시켜야 함.
  - 기존의 정기공모 방식(1년 1회 지원 가능)으로 인해 특정한 시기(1~3월)에 업무 과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그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지원정책에 대한 소개, 현장과의 소통, 심사에 대한 진행 등)가 가중됨. 이러한 업무 과부하는 심사 및 발표 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예술창작활동의



시기가 중, 하반기로 이동하게 됨. 결국 이러한 쏠림, 몰림 현상은 다시 업무 과부하를 야기함.

- 차후년도 계획 수립 시기와 본년도 정산 시기의 중첩, 작년도 사업 정리와 본년도 공모 시기의 일치는 개별팀 단위의 지원조직의 업무 혼란과 과부하를 야기함.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 환류가 어려움. 해당 연도 행정업무가 미완료임에도 차후년도 행정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업무의 중첩 현상이 발생.

#### ③ 업무의 비효율성, 업무의 반예술성

- 단계별로 예술가가 제출한 공모서류 내용을 입력시스템으로 옮기는 단순기입 업무가 반복, 업무의 내용 또한 단순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가 상당량을 차지.
- 창작지원 파트가 재단의 고유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업무의 단순반복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를 수행하는 행정 인력들의 업무 만족도가 낮음. 단순업무 및 민원처리, 정산처리 등등이 창작지원 본연의 업무인지 의문이 듦.
- 사업 담당의 행정적 주체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정작 본업무에 대한 예술적이고 창의적 방안 및 개선안을 도출하기 어려움.

#### ④ 예술창작지원의 규모에 맞지 않는 운영시스템

- 주요 문화정책 흐름과 맞물려 예술창작지원의 규모는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운용 및 관리시스템은 확대되지 않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등과 같은 온라인 입력 시스템의 미비, 미활용. NCAS는 2014년 초 개편 이후 정체되어 고도화가 반영이 안 됨.

#### ⑤ 현장과의 소통

- 정보전달 및 정보공개: 창작지원의 특성상 현장예술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 범위와 성격이 매번 다름. 그 과정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현장의 불만과 아쉬움이 발생함.
- 민원 발생: 공모 절차 및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심사 이후 발표에 대한 무리한 민원 발생, 현장의 제도 인식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대처 업무의 과다함.
- 단계별 발생하는 행정업무와 문제점에 대해 재단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현장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⑥ 예술가와의 관계성

- ‘창작지원’에 부가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상호합의가 없음. 업무에 따른 역할에 있어서 서로 간의 오해 발생.
  - 업무 과부하로 인한 행정 몰입 현상은 현장예술가에 대한 케어, 피드백, 관리 소홀 혹은 소홀에 대한 오해로 이어짐.
  - 예술가와의 소통을 위한 시간에는 동의하나, 물리적인 절대시간의 부족.
  - 상호 존중감 부족: 수혜받는 예술가는 소통하고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끼지만, 창작지원제도를 함께 수행하는 행정가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함.
  - 제도가 갖고 있는 소수 혜택 범위와 공정성, 공공성 시비로 인한 예술가 친화의 어려움.
- #### ⑦ 행정가에게 전가된 예술가의 책무성, 제도의 특이성
- 예술가의 행정 오류에 대한 개별 담당자의 과도한 책임 부여.
  - 행정과정에서 발견한/발생한 적합하지 않은 방법 또는 행위로 인하여, 행정가가 열린 마음으로 예술가와 파트너십을 맺기가 쉽지

않음.

- 상부기관 감사에 의한 담당자의 불이익 조치: 예술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행정가에게 전가됨.
- 상호 간 소통에 대한 감각 부족, 파트너십의 부재, 상호 체감하는 정책 효능감이 떨어짐.
- 처리 업무의 양과 범위, 성격에 비해 권한이 없음. 방어적인 예술행정이 될 수밖에 없음.
- 심사 및 평가에 대한 예술행정가의 부담 범위가 큼.

#### ⑧ 행정체계 간소화에 대한 제도적 난제

- 제도 내의 고도화가 너무 진행이 되어 있거나, 법 조항 등을 근거로 창작지원을 위한 행정체계의 개선이 어렵거나 아예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국비, 시비 사업의 경우, 행정처리에 있어서 기존 처리 범위 내의 문서화된 근거가 필요. 따라서 예술적인 창작활동과 행정처리가 대치되는 규정 위반 케이스가 발생.
- 상부기관에 의한 정책사업 및 위탁사업의 경우,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거나 효율화하기 어려움.

#### ⑨ 다변화된 예술계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체계

- 예년과는 달리 예술계가 복잡해지고 이슈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야 할 필요가 생김. 서로가 생각하는 대표성과 전문성의 개념이 분화되고 대립되면서 현장과 접점을 가져야 하는 행정가의 경우, 어려움이 발생.
- 예술계 혹은 현장의 경험이 부족한 예술행정가의 경우, 담론 그룹 및 세대 그룹과 소통의 범위나 경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
- ‘창작지원’ 업무 담당 또한 재단 내 순환보직을 따라야 하는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재의 행정체계는 예술가와 행정가, 심사(평가)자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아님. 행정담당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단순업무의 이행자가 될 수밖에 없음.

#### 참고) 표-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추진 절차

절차	구분	내용	역할
준비	사업설계	타 기관 사례 조사 및 환경 분석, 진단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사업방향 설정	
	사업계획 수립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총괄 기본계획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공고문 확정	
	홍보	보도자료 작성/배포	
		사업설명회	
	심의위원 공개 추천 계획 수립	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예술현장 대상 심의위원 공개 추천 및 타 기관 추천 계획 수립	
		홈페이지 공고 게시	
	통합심의위원 풀 운영계획 수립	재단 자체 구성+예술현장 공개 추천+타 기관 추천을 통한 통합심의위원 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상/하반기 2회)	
공모	공모 접수	홈페이지 공고 게시	
		온라인 접수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절차	구분	내용	역할
심의	심의계획 수립	선정 심의계획 수립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장르별 심의위원 3배수 구성	
		심의위원 섭외	
		심의위원 확정 보고	
	행정심의 진행 (1차)	사업담당자의 신청자격,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행정사항 확인 및 예비 검토	
	서류심의 진행 (2차)	행정심의(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류심의	
	토론/인터뷰/ 현장실사 진행 (3차)	서류심의(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토론/인터뷰/현장실사 심의 *사업별 상이	
	심의 결과 보고	심의 결과 보고 수립	
교부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 발표(홈페이지 공지) -심의 절차 및 기준, 심의위원 명단, 심의 총평, 선정자명, 선정사업명, 지원결정액 등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지원금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법, 지원금 관리 규정 등 개정사항 검토 후 지원금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	
	선정자 간담회	장르별 선정자(단체) 대상 선정사업 추진 안내 -지원금 교부 → 집행 → 정산 관련 지침 안내 -성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2018년 도입)	
평가/ 모니 터링	지원금 교부	장르별 선정자(단체) 대상 지원금 교부 진행 -변경신청(선정자) → 변경신청 승인(재단) *신청 대비 변경사항을 적용한 선정사업 최종 확정 -교부신청(선정자) → 교부신청 승인(재단)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 외부 발주
	평가계획 수립	사업목표 대비 성과 도출을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 운영계획 수립	
	사업평가/ 모니터링	선정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 및 전문가 현장평가 운영	
	사업 만족도 조 사	선정사업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 개선방안 연구	
	정산체계 개선계획 수립	지원 선정자의 정산 부담 완화 및 지원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중간지원 제공(2018년 도입)	
	회계검증 (정산용역) 수행	지원 선정자 회계교육, 세무상담, 정산보고서 검토 등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 외부 발주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절차	구분	내용	역할
정산	정산/성과 보고	선정사업별 지원금 집행관리 지침에 근거한 정산 보고서 검토 - 정산/성과보고서 제출(선정자) → 정산/성과보고서 승인(재단)	예술기획팀 (구 창작지원팀)
환류	환류조치계획 수립	창작지원본부 예술지원사업 대상 평가 결과 및 정 산/성과 보고 완료 여부 등에 근거한 환류조치계획 수립(차년도 환류 적용 대상)	
종료	사업 결과 보고	사업별 결과 보고 및 전체 정산 보고(예술위원회, 서울시 등)	

### 3) 개선과제

#### ① 행정체계와 관련된 제도 개선

- 전담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업무 간소화: 과다한 업무의 축소 및  
특정 단계 폐지.
- 단순반복업무, 전문성 요구 업무, 민원업무에 대한  
탈내재화(외주화) 고려.
- 상시 지원 및 다년도 지원설계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간편화.

#### ② 지원조직의 혁신

- 예술가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서 및 업무 마련:  
창작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신(新) 행정체계 구성TF 도입.
- 정산, 평가, 민원처리 등의 전문 분야에 맞춘 독립적인 그룹 혹은  
팀 조직 운영(정산은 외부 전문 단체, 평가는 내부의 평가위원회에  
맡기는 방식 고려).
- 심사평가위원회, 정산처리팀 등 행정체계에서 감수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도입.
- 행정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조직에 대한 외부 방어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 민원대응팀, 현장소통팀 등.

○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책임 분담 및 단계별 업무의 분화:

평가위원회, 현장소통팀 등의 예술가가 참여한 매개조직 운영을 통한 책임 분담.

③ 지원제도의 내용 개선

- 예술가의 창작주기에 맞춘 행정처리서비스 도입: 예술가가 구상하는 작업의 총과정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단계적 전환 유도.
- 정산에 실패한 예술가 구제제도 등 행정처리 관련 출구 전략 모색.

④ 시대에 맞는 예술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기존의 예술DB 운영체제로는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자료 등을 활용할 수 없음. NCAS 시스템과는 차별화된 재단만의 고유한 예술정보시스템 마련 필요.
- 연동이 용이하고 쉽고 간소하며, 유의미한 DB 수집과 향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예술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 사용자 입장에 맞춘 방식으로의 전환(예: 구글독스의 형태 같은 간결한 지원신청 방식, 대용량 첨부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업로드나 스트리밍하는 방식 등 시대에 맞는 입력 방식 수용).

⑤ 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현

- 창작지원제도의 당사자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행정담당자 등의 입장이 반영된 운영시스템으로의 개선.
- 법제도가 보장하는 창작지원의 안전한 실무 환경 구축.
- 예술가의 창작권과 예술행정가의 노동권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마련.

⑥ 예술지원사업 파트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사제도 개선

- 정책전문성, 현장소통성 등 창작지원 파트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일정 기간 축적되어야 하는 성격의 업무임. 지원제도의 고도화에 따른 정책의 이해도와 숙련도가 여타의 파트와는 다르게 강하게 요구됨. 더불어 지원사업에 대한 사명감이 요청되는 부서임.
- 그러나 순환보직제로 인해 개개의 인력이 이를 구현하고 달성하기가 어려움. 기계적인 순환보직은 담당부서가 정책에 대한 실행력과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갖기 어려움.
- 재단 조직 차원에서 창작지원 파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순환보직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직의 유연성과 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3-5년 정도의 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되기 과정이 필요함.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는 경력 개발의 기회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4) 기대 효과

- 재단 내 고유사업인 창작지원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
- 행정체계의 당사자인 예술행정가와 예술가와의 소통기능 강화
- 예술가의 창작주기에 맞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인한 상호 신뢰 회복
- 운영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예술가 참여로 인한 민관 거버넌스 구현
- 행정체계를 운영하는 조직과 이를 담당하는 개인의 조화

## 4-4. 지원의 절차와 과정

### 1) 추진 배경

#### ①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공개주의 원칙 확대 필요

-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창작지원사업 운영 시 기본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지원사업 선정 결과 등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 견지, 심의 공개주의의 단계적 확대 필요
-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문학 장르에만 적용되던 블라인드 심의제도를 예술작품지원사업 등의 서류심의에 확대 시행.
  - 동료심의제·심의참관제 등 대안적 심의제도 개발.
    - 서교예술실험센터 소액다کم, 문래예술공장 MEET 사업 등에 지원사업 신청 동료집단 간 신청사업 정보의 공유, 상호 토론을 통한 참여형 심의제도 시행.
    - 공연장상주단체 인터뷰 심의 시, 희망하는 예술인·단체들에게 사업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인터뷰 참관 기회 제공.
  - 예술 현장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공개추천제도 도입.

#### ② 블라인드 심의제도의 보완

- 블라인드 심의제도는 서류심의 시 신청한 예술인·단체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심의위원과 신청자 간 사전 인지 가능성, 신청 예술인·단체의 지명도에 근거해 심의하는 것을 방지하여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
  -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무용·전통예술 등 상대적으로 학연과 인맥 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블라인드 심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장르와 무관하게 활동 경력이 짧은 예술인·단체들의 경우에도 충실한 서류심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 심의과정에서 신청한 예술가·단체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 블라인드 심의는 심의 정보의 부족성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이 상호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함.

#### ③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감 강화, 심의 진행의 물리적 제약 요건 개선

-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의위원의 전문성
  - 위촉된 심의위원의 사회적 지명도, 직군의 전문성보다 심의에 참여하게 될 해당 분야 예술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가 중요.
- 통상적으로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체계 관리 시, 특정 전문가가 연속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게 될 경우 권력화 및 심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사 및 평가 회차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운영
  - 이러한 일회적인 심의·평가 참여 구조의 반복으로 인해 심의·평가체계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
- 심의 진행의 물리적 제약 요건
  -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심층적인 내용 검토, 심의위원들 상호 간 토론이 어려운 한계.
  - 심의 분량, 책무 대비 심의 사례비 부족.

#### ④ 심의·평가지표 개선 및 예술현장 소통 확대

- 심의·평가지표의 합리적 개선
  - 심의 단계에서 대외 홍보, 모객 규모,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판단하거나, 평가 단계에서 사업의 지원 타당성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

- 심의 및 평가 단계의 핵심적 판단 요소들을 중심으로 지표를 재정비하여 심의·평가 기준 명확화.
-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소통과 피드백 부족
  - 심의 결과 총평 외 사업별 선정, 미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요구.
  - 지원사업 탈락 예술인·단체 대상 컨설팅 등의 지원 필요.
  -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이의제기 절차의 간소화 등.

## 2) 현황

### ① 심의위원 풀 작성

- 심의위원 풀 구성 경로
  - 지원사업 담당자, 부서 자체적으로 발굴 및 추천한 전문가.
  - 타 지역 문화재단 등 지원기관을 통해 추천된 전문가.
  - 예술현장 공개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전문가.
- 심의위원 풀은 1년 단위로 갱신, 풀에 포함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촉 과정을 거쳐 지원사업 심의위원 및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

### ②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심의위원 풀을 기초로 심의에 참여하게 될 세부사업, 장르, 연령, 성별, 지역별 비율 등을 감안하여 심의 유형별 3~5배수 내외 위촉 대상자 추천
  - 3~5배수 위촉 대상자별 섭외 우선순위 확정.
  -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별 심의위원 섭외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위촉 대상자의 수락 혹은 거절 등의 이유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 동일한 후보군 내에서 추가로 위촉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가 섭외 진행.

### ③ 단계별 심의 진행

- 행정심의
  - 해당 지원사업 담당자, 지원신청자격·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적격성 검토.
- 서류심의
  - 심의위원별 심의 개요 및 심의기준 안내, 심의자료 발송.
  - 서류심의 종료 전까지 대외·심의위원 간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 서류심의를 블라인드 심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심의위원별 채점제로 운영.
  - 심의운영 간 심의위원과 심의 대상 사업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심의 회피 및 제척 제도 적용.
- 토론심의
  - 서류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수 1.5배 내외의 신청사업을 선별하여 심의위원 간 토론심의 진행.
  - 토론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및 사업별 지원금액 확정.
  - 인터뷰심의를 적용되는 사업들은 토론심의를 거쳐 최종 인터뷰 대상자 결정.
- 인터뷰심의
  - 사업 유형별 질의응답,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 ④ 심의 결과의 공지, 정보공개요청 및 선정사업 평가
  - 심의 결과 확정 및 공지
    - 취합된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 명단, 지원금액을 포함한 선정사업



내역, 사업별 심의 총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지.

○ 심의 결과 정보공개요청 및 이의제기

- 심의 결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 당사자 사업에 대한 심의 접수 등 정보공개.
- 심의위원의 적격성, 심사 절차 및 방식의 비위 등에 대한 이의제기 시 감사부서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의 재심의 진행.

○ 지원선정사업의 평가

- 현장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행정평가로 진행.
- 현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시민모니터단과 심의위원 풀에서 위촉된 평가위원으로 평가단 구성 후 현장평가 시행.
- 행정평가, 현장평가의 결과는 차기 지원사업 심의 시 환류자료로 반영.

3) 개선과제

① 지원 정보 접근권 강화

② 지원 기간 내 예술인 설명회와 정보서비스 확대

③ 심사와 선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원칙

④ 심사 결과에 대한 지원자 설명 및 서비스

⑤ 선정사업에 대한 홍보와 리뷰 및 비평활동의 강화

⑥ 선정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⑦ 지원의 처음과 끝의 유기적인 과정과 흐름 개선

① 예술현장의 지원사업 정보 접근권 강화

○ 예술지원 서비스센터로서의 지원기관

- 지원기관이 공급자 관점에서 Top-Down 방식으로 예술계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지원사업 운영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예술가, 예술단체, 예술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 위기에 처한 상황들에 능동적으로 개입·조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센터로서 예술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 점점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장·자본의 논리와 예술적 공공성 사이에서, 시장 논리에 대한 공공적 방어기제의 역할, 훼손된 예술생태계의 환경적 복원·보존.
- 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 상시적 상담·컨설팅 등 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과정 전반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매개지원 역할 강화.

○ 지원사업 정보서비스 상시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상으로 지원사업 관련 정보 상시적 제공.
- 이와 병행하여 시기적으로 지원사업 공모 전, 심의 결과 발표 후 희망하는 예술인·단체 대상 컨설팅 지원.

○ 정보공개요청 및 이의제기 제도

- 정보공개요청은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 심의 불공정 및 비위 사례 관련 이의제기 제도는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이의제기 대상, 심의 결과 발표 후 이의제기 시한, 이의제기 절차, 조사 및 사후 조치 방법 등.

○ 심의·평가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

- 심의·평가위원의 이력
- 지원사업 신청·선정 예술인, 단체, 사업 관련 이력
- 심의 내용 및 평가 결과

② 심의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 확대보다 절차적 공정성과 공개주의 강화
  - 심의·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사후 공개를 물리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심의과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심사 절차와 과정의 공개주의 원칙을 강화하여 지원기관 및 예술계 상호 간 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원칙: 현장중심주의와 비례대표성
  -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요건상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현장전문가 중심주의를 반영.
  - 개별 심의위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과 더불어 심의위원회 구성 전체 맥락에서는 나이·성별·학교·지역 등을 고려한 비례대표성에 입각, 위촉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공개주의 강화 및 심층심의 확대
  - 심사 절차 및 과정의 공개주의 강화
    - 인터뷰·PT 심의 단계의 심사과정 및 내용에 대한 공개 범위 확대.
    - 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공개심사, 심사참관제도 등의 방식 활용.
    - 심의 내용 동영상 기록 및 자료화, 인터넷·온라인 중계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 우려 및 심의과정의 몰입도와 책임감 등을 저해시킬 수 있음.
  - 블라인드 심의제도 보완
    - 심의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유지하되,
    - 모든 장르, 사업 유형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블라인드 심의제도의 장점이 명확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 블라인드 심의 진행 시 심의 정보의 불충분성이 우려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추가로 취합,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모색.

- 심층심의 확대
  - 심의 방법론상 서류심의의 비중 및 중요도를 낮추고, 신청 예술인·단체 대상 인터뷰 등 심층심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최종 선정수 대비 1.5배 내외의 심층심의 규모를 3~5배수 내외로 확대.
  - 심층심의 중심으로 심의 방식을 재구성하게 될 경우, 심의 절차 소요 시간 산정 및 심의 사례비 증액 등의 요소도 동시에 고려.

### ③ 심의·평가체계 개선

-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기관의 특성상 창작지원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별로 심의·평가 업무가 분산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음.
  - 한정된 인력으로 담당 사업별 심의·평가 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업무 과부하와 부서별 업무 중복성에 따른 행정적 낭비 요소 발생, 심의 및 평가체계 관리 전문성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 재단 조직 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심의위원 풀 관리, 심의·평가위원 섭외, 심의·평가회의 진행, 심의·평가 결과 관리 등을 전담하는 방안.
    - 국내 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지원팀(부원장 직속, 정원 6명),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심사지원팀(위원장 직속, 정원 2명).



####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 기능 활성화

- 심의위원 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지원사업 공모 시기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일정한 임기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
- 사전에 작성된 후보군 내에서 심의·평가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심의·평가위원의 자격 기준, 예술현장의 변화에 따른 신규 전문가 그룹의 발굴 및 추천 등의 적극적 역할 수행.
- 분기별 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여, 지원사업 심의·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자문.

#### 4-5. 정산체계의 혁신

##### 1) 추진 배경

##### ① 보조금 관리 기준의 일방적인 개편과 정산시스템 도입

- 201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총괄담당관-1623(2010.08.18.)호] “문화예술진흥보조금 횡령 등 부패 개선방안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통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전면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내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목적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관리·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에 의한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보조금 주관기관 등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보조금 지원 행정업무 전국 표준화와 지원사업의 통계에 대한 정보 공유환경을 제공함.
- ▶ 2018년 8월 기준, 총 16개 기관 사용 중  
광역자치단체(1)/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13)/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2)

출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ncas.or.kr)

- 2013년 11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편(재구축) 진행
- 2014년 0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하 NCAS) 개편 적용 후 2019년 현재까지 사용(계속)
- 2017년 01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도입 및 2019년 현재까지 사용(계속)

※ 도입취지

- ▶ 국가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
- ▶ 보조금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사업 유사·중복을 검증하고, 수급자격 및 지출증빙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
- ▶ 전자적 처리와 업무 표준화, 온라인화로 담당자, 신청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 제고
- ▶ 보조사업 정보제공, 보조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공개로 대국민 보조금 서비스 개선 및 투명성 제고

※ 법률근거(의무사용 근거)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26조의3 및 4(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②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출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 2017년 06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 정보공시 적용범위

-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정보공시 사항

-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다음 페이지에 계속)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출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 최상위 전달체계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 사업 가이드라인의 결정 권한이 독점됨. 중간 및 하위 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 예산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및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장에 충분한 사전 안내,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는 절차가 생략되고, 보조금 사업 수혜의 의무사항 및 운영 매뉴얼 형태로 현장에 일방적으로 전달됨.
- ② 현장예술인의 부담과 혼란 증가
  - 2017년 1월부터 적용된 e나라도움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이 미반영, ‘사전-증빙’이 검토되는 최상위 관리자 중심 시스템 구조로 감시와 통제가 우선시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매우 취약함.
  - e나라도움의 실무적인 추진과정의 경우 충분한 사전 공유과정(시범 운영)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 정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의무화.
  - 상위기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 다른 운영 매뉴얼이 존재함.
  - 초기 불안정한 시스템과 안내로 현장에서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현장예술가들이 창작 작업보다 행정에 매몰되는 현상을 초래함.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별 국비, 시비, 재단 출연금 등 재원 출처에 따라 지원사업 정산 방식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  
현장에서는 보조금 재원의 출처와 행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업별 정산 기준과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혼란이 발생함.

### ③ 사업 규모 증대와 정산업무량 과다로 인한 사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 가중

- 창작지원본부 예술지원사업 규모 확대: 2016년 9,377,000천 원 → 2017년 15,445,220천 원(전년 대비 64% 증액) → 2018년 16,122,000천 원.
- 재단 사업담당자의 경우 e나라도움 학습, 재단 방식의 매뉴얼 개발, 현장 민원 및 상시 안내, 정산 검토 등 관련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됨.
- 재원 구조에 따른 상이한 정산 방식, 소액다건형의 지원사업 구조로 인해 정산 관리 업무 가중.

〈표-2018 e나라도움 정산이 적용되는 예술작품지원 선정자 수〉

장르	선정단체	지원결정액
연극	46	1,142,000
무용	37	712,000
음악	59	707,400
전통	57	583,000
다원	22	513,500
시각예술	113	966,000
소계	334	4,623,900

※ 전체 지원사업 건수 / e나라도움 정산 적용이 되는 수 포함

## 2) 현황

- ① 재원 출처에 따라 각기 다른 정산시스템 사용과 정산 방식 적용
  - 현재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의 경우 재원 출처 및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정산시스템 사용과 정산 관리가 적용됨.
  - 서울문화재단 사업 중 일부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 신청을 받고, 미정산 및 정산 자료를 별도 제출함. 해당 시스템 사용 시 결과 아카이브 및 통계자료 등의 활용이 불가함.

〈표-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별 사용 시스템 현황〉

구분명	(재단) 홈페이지	NCA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운영 주체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재정부
접속 url	www.sfac.or.kr	www.ncas.or.kr	www.gosims.go.kr
사업명	장애예술인창작지원사업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 서울을바꾸는예술 창작공간 프로젝트공모 등 창작공간 입주공모 등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작품지원 예술가지원 유망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예술축제지원 서울메세나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작품지원

- 서울문화재단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NCAS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신청-교부신청-정산 및 결과 관리가 진행됨. NCAS의 경우 16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서울문화재단만의 편의나 수정사항이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현재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중에서 ‘예술작품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시비), 재단 출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국비는 2017년부터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현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재원이 변경되어 내려오면서 20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예술작품지원사업은 국비, 지방비, 재단 출연금이 매칭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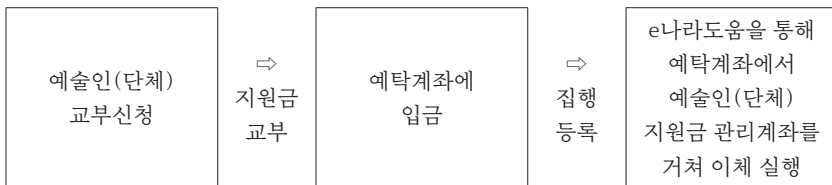
- 선정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
- 지원금 사용 및 정산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성과 보고 완료 및 정보공시 처리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과 더불어 예술작품지원사업의 재원(국비매칭사업) 특성에 따라 장르별 지원금 교부 및 사용 방식이 다름.

▶ 연극, 무용, 음악 장르

- 예술인(단체)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하면, 재단에서는 검토·승인 이후 예탁계좌(예금주: 한국재정정보원)에 지원금을 입금함. 예술인(단체)이 가지고 있는 지원금 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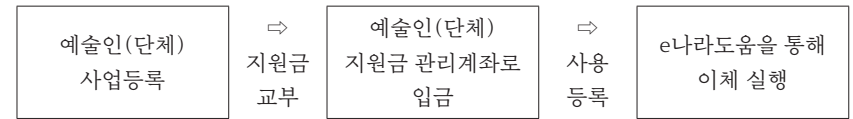
<그림-국비매칭사업 예치형 사업 교부 과정>



▶ 다원, 시각, 전통 장르

- 예술인(단체)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면, 재단에서는 검토·승인 이후 예술인(단체)의 지원금 관리계좌로 입금함.

<그림-국비매칭사업 비예치형 사업 교부 과정>



②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와 사용자 편차

- e나라도움 도입 초기 충분한 사전 공유과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준비과정에서 주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 기존 NCAS와 e나라도움 사이에 최소한의 호환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로 예술계 현장에서 ‘e나라도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일부 불편사항이 개선되어 e나라도움 사용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는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NCAS(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병행 사용에 따른 혼란이 존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은 예술지원사업 프로세스 중 ‘공모/심사/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목적의 NCAS 시스템 전반을 통합하기 힘든 구조임.
- 이에, 국고가 포함된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공모/심사/평가에 대한 채널은 NCAS로, 교부/집행/정산에 대한 채널은 e나라도움으로 병행 사용 중이고, 보조사업 관리자(재단),

보조사업 수행자(예술가) 모두 두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에 따라 복잡성 가중됨.

- e나라도움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이 개선되었으나, 예술단체 내 기획·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의 편차가 존재. 개인 예술가의 경우 편차가 더 크게 존재하며, 기획-창작-실연-정산의 모든 과정이 한 개인 예술가의 의무로 적용되고 있음.
- e나라도움, NCAS 모두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설계·운영되는 시스템이어서 재단 입장에서만의 개편이나 조정이 어려움.

### ③ 정산회계검증제도 도입

- 재단은 2018년부터 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회계 검증을 시행하여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술인·단체 대상의 정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정산회계 검증」 기관 선정 입찰을 통해 회계 검증 및 정산 절차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원사업 공모 시 정산회계검증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별 선정자 대상 간담회에서 다음의 해당 내용을 안내함.
  - 정산 회계 검증 절차 및 세부 내용
  - 지원결정액별 회계 검증 수수료 책정 및 집행 방법 안내
  - 전문 회계세무 컨설팅 내용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인·단체에게 지원금 정산과정 전반에서 전문 회계세무 교육, 상시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주체	기존	주체	개선(안)
지원사업자	· 현장에서 지출 건별 증빙 원칙 숙지 및 준수 어려움에 따른 오류 집행 증가 · 회계 세법 전문지식, 정산시스템, 행정처리 절차 숙지 및 처리에 부담과 혼란 가중	지원사업자	· 정산 기준 및 원칙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상시적·직접적 안내 채널을 구축하여 예산 집행 및 증빙의 정확성 강화 · 정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 정도가 상이한 예술인·단체 대상 개별 응대 및 맞춤형 교육 및 안내를 통해 부담 및 혼란 최소화
재단담당자	· 소액다건의 지원사업 구조 및 사업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관리 지원사업 건수 폭증 · 세법 및 회계 관련 전문 분야를 예술현장 개별 상황에 맞추어 상시적으로 안내 및 관리하는 데 한계 · 지원사업별 정산 원칙과 기준이 세분화, 선정사업자 종류가 다양해 개별 정산 문의 응대 및 보고서 검토에 대한 업무 부담 가중	전문기관	· 예술인·단체 대상 전문인력의 정산절차 교육, 개별 맞춤형 문의 응대, 세무회계 처리 방법 상시 지원, 지출내역 검토 보완 · 정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지식에 기반한 검토 및 입증
		재단담당자	· 세무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예술지원사업 특성에 기반한 정산 관련 안내가 구분되어 사업 성과 및 실적의 질적 검토 관리 가능 · 정산 관리의 효율성 증대로 업무 부담 완화

외부 전문기관의 중간지원 및 검증체계 구축 · 정산 검토의 정확성 및 투명성·사용자 편의성·정산업무 효율성 강화
---

### 3) 개선과제

- ① 행정체계 혁신 및 관계 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정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문화예술 e나라도움 의무 사용 예외 사례 적용 추진
  - e나라도움의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정착화되어가고 있지만, e나라도움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예술의 가치 회복이 필요함.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인 지역 문화재단, 예술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e나라도움 시스템 의무 사용에 예외 사례(통일, 안보 등)와 같이 예술 영역도 사용 부적절 유형으로 포함시켜야 함.

- NCAS-e나라도움 간의 연동 기능 구축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유지할 경우, 정보 연계에 대한 구축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중업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개선 노력 필요.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NCAS 시스템 리뉴얼
    - 2011년 도입되어 시스템 낙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모바일에서의 사용, 앱을 통한 사용, बैं킹 기술 도입 등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
- ② 서울문화재단만의 정산체계 혁신과 시스템 도입
- 재단만의 지원사업 시스템 개발과 적용
    - NCAS, e나라도움 사용에서의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현장 및 사업 담당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신청-교부-정산) 개발이 필요함.
  - 정산 혁신이 반영된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 개발
    - 개인 예술가의 창작활동, 과정 지원사업의 경우 시상금 형태의 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정산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
  - 재단 '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및 운영 지침 개편
    -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서울문화재단 '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 필요.
    -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산의 생략 및 간소화 방안 마련.
    - 지원금 내용 중 예술창작활동 수행에 따른 필요 경비 인정.
  - 정산체계 개편을 위한 TFT 구성 및 정산 매뉴얼 구성
    - 현장, 사업담당자, 회계세무법률 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재단 정산체계 운영 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
    - 정산 관리 및 매뉴얼에 따른 회계 세무법률 검토 진행.

- ③ 상시 안내가 가능한 지원사업 전담 서비스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 정산 지침 안내 및 교육
    - 온·오프라인 정산 관련 문의 실시간 응대
  - ④ 정산회계검증제도의 지속 운영과 안정화
    - 2018년 정산회계검증제도의 불편 및 문제점 개선
    - 예술현장 이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운영 노하우가 구축된 회계검증기관 선정
- 4) 기대 효과
- ① 지원사업의 본질인 창작 및 예술 역량 강화에 집중
    - 정산 간소화를 통한 창작 및 예술 역량 강화에 관한 물리적 시간 확보
    - 현장의 지원사업 만족도 향상
  - ② 재단 사업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
    - 정산업무 관련 현장의 민원 및 응대에 관한 물리적 시간 감소
    -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 축소
  - ③ 정산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행정업무 간소화, 창작 중심의 현장 환경 존중, 관리와 통제 최소화 실현
    - 정산체계 혁신의 선도 사례로 중앙, 광역, 기초 문화재단의 정산체계 개편 계기 마련

5장  
영역별 지원체계 개선



## 5-1. 문학 분야

---

### 1) 지원 현황

#### ① 개요

##### ○ 지원사업

- “문학 첫 책 발간지원” 및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 ○ 지원목적

- “우수 문학작품 발간 및 작품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발전 도모”

#####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문학 첫 책 발간지원” 및 “문학 창작집 발간지원”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지만 “문학 첫 책 발간지원”의 지원대상은 등단 이후 아직 ‘첫 책 발간 전’인 작가.

: 국내 신춘문예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작가 중 개인 창작집이 없는 작가. “단, 신청 장르가 등단 장르와 일치해야 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음.

- “창작집 발간지원” 지원대상: “개인 창작집이 있는 작가”로서 “등단 15년 이하”(2019년의 경우 등단 연도 2004년 이후)와 “등단 16년 이상”(등단 연도 2003년 이전)으로 구분. 역시 “단, 신청 장르와 기출간한 개인 창작집 장르가 일치해야 함”이라는 단서가 있음.

##### ○ 신청서 양식

- 신청사업명(해당란에 ○ 표시)

※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 정보 기재, 희곡작가의 경우 공연 정보 기재

##### ○ 지원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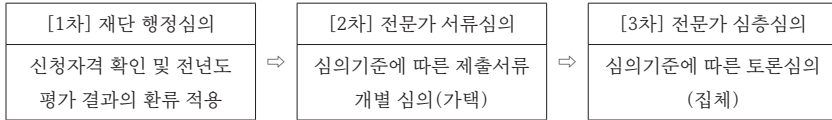
- 1천만 원 정액 시상금 방식 지급으로 두 사업 동일.



## ○ 지원 규모

- 2017년 총 40건 4억 원 지원. 2018년 총 50건 선정, 5억 원 지원 결정(2018년의 경우 684건 응모, 2017년 633건보다 지원 건수가 다소 늘어남). 약 10대 1의 경쟁률.

## ○ 심의 절차



## ○ 심의기준

- 2차 전문가 서류심의 기준: 제출 원고의 우수성과 완성도(100%).
- 3차 전문가 심층심의 기준: 아래표와 같음.

심의기준(가중치)		세부 평가 내용
사업계획	집필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 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필 방향 및 작품 성격의 적정성</li> <li>- 제출 원고와 집필 계획의 부합성</li> <li>- 출판사 확정 여부</li> </ul> </li> </ul>
사업실행	원고의 우수성/완성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 원고는 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완성도가 높은가?</li> </ul>
	작가의 수행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간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 이력 및 주요 활동 실적</li> <li>- 작가 창작 역량 및 발전가능성</li> </ul> </li> </ul>
사업성과	창작집 발간의 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된 창작집은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가?</li> <li>• 계획된 창작집은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li> </ul>

- 즉 행정적 심의기준 이외에는 작가가 직접 작성하는 “창작집 발간 계획(집필 취지 및 일정 등 세부 집필 계획 작성, 전체 1~2 페이지 내 작성)”과 “창작집 세부 내용(작품의 성격, 목차 등 구성 내용 작성)”을 중심으로 심사. 그러나 “작가의 수행 역량(30%)”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음.

## ○ 심의 원칙(홈페이지 공고)

-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 목표 부합 여부 검토
  - 공고된 신청자격 요건 부합 여부 검토 및 적용
- 전년도 지원사업 운영실적 환류 및 관리 규정의 엄격한 적용
  -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관리 규정’ 미준수 개인에 대한 지원자격 박탈
- 창작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복 수혜 배제
  - 재단 예술지원사업 내 동일사업 중복 선정 불가 원칙

## 2) 개선 방향

### ① 서울문화재단 문학지원사업의 근본 의의를 분명히 하고 변해가는 문학 환경에 걸맞은 지원제도로의 방향 전환 필요

- 현재 지원사업의 취지는 “우수 문학작품 발간 및 작품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발전 도모”(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라 되어 있음. 한국문학은 전통적으로는 ‘민족적’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공동의식과 삶을 표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으며, 다른 한편 모든 분야의 원콘텐츠의 구실을 해왔음.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취지에서의 “한국문학 발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왜 서울문화재단이 “한국문학 발전”을 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오늘날 한국문학을 공적 자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의 의미
  - 전반적으로 기성 문단문학의 위상이 약화되고 장르문학과 새로운 대중문학이 젊은 세대의 삶에 더 큰 영향을 갖게 된 상황임. 또한 2015년 이후 신경숙 표절 사건,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운동 등에 의해 한편 크게 변화하고 한편 침체한 한국문학장의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문학지원제도가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됨. 확대하면 이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문학의 관계 또는 문학예술의 대사회적 기능의 문제와도 연관됨. 그렇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문학지원사업은 엘리트 ‘문학’가들을 위한 ‘예술’ 지원이나? 아니면 문학예술 향유자들을 위한 공공성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의 차원인가? 또는 문학장의 재생산을 위해 기여하는 정책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기존의 사업은 ‘신진 또는 기성 문학가들을 위한 예술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졌으며,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성의 문학 질서와 규범에 따라 문학을 재생산하는 효과를 가졌음.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그리고 그 같은 의지를 서울문화재단이 가졌는가?에 따라 개선의 방향은 크게 달라짐. 전면적 개편을 통해 서울문화재단만의 문학지원제도를 새로 구축하는가? 아니면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가?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② 서울문화재단만의 독자성과 ‘서울’의 의미를 살리는 지원 방안<sup>2</sup>

- “한국문학 발전”이라는 취지로는 다른 기관의 문학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갖기가 불가능함. 실제로 현재 문학지원사업의 구조 및 사업 방식은 타 지원기관과 대단히 유사함.

: 예컨대 경기문화재단의 문학 분야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작가”를 대상으로 “유망 작가. 등단 작가(1979.1.1. 이후 출생자)”와 “우수 작가: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 등을 통해 등단한 작가로 최근 3년간 문예지 등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 2) 이 연구 보고는 현행 제도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이기에, 서울문화재단 문학지원사업의 큰 방향 전환이 기해질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작품집을 발간한 실적이 있는 작가”를 5백만 원 또는 1천만 원 지원함.

-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제도’도 발간된

작품집을 1천만 원어치 구매해주는 제도임. 문학 분야 패널리톤에 참여한 한 수혜자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하기도 했음. 그만큼 예를 든 주요 지원기구들의 지원제도는 비슷하고 개성이 없으며 ‘작가’ 위주임.

- 작가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지망생·신진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가라는 정체성의 인정과 창작활동에 대한 격려이며, 작가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지·지원임. 양자에 다 걸치는 것은 발표 기회와 지면, 그리고 그를 통한 독자와의 교호임. 그러나 시민이나 사회에 초점을 둘 경우는 달라짐. 필요한 것은 뛰어난 좋은 작품, 그리고 작품을 읽어주고 문학가를 존중하는 분위기임. 현재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제도는 모호함(『문학과사회』 편집위원 조연정 등).

- 따라서 만약 ‘서울의 문학’은 무엇이며, 특히 서울문화재단만의 문학지원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제도나 지원대상 등을 바꿀 필요가 있음. 방향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청년문학가 지원제도, 새로운 ‘서울문학상’의 제정 등이 필요함. 그리고 지원대상을 등단 작가(의 작품집)가 아니라 문학 플랫폼, 서울 거주 이주자, 서울 소재 문학 등으로 다원화하여 바꾸는 혁신도 가능할 것임. 문학 플랫폼에 대한 지원은 패널리톤에 참가한 여러 문학가들이 제기한 대안으로 작가들의 네트워크나 지면, 즉 자발적 문예지나 독립문학 잡지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함. 이는 한국문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인문학과 청년문학가들을 지원하는 의의가 있음.

: 예컨대 현재 문학 분야 예산 5억(2018년 기준) 중 2억 정도를 배분하여, 서울청년문학상, 서울논픽션문학상, 서울이주민문학상, 서울노동문학상 등의 상금으로 설정하고 독립문학 잡지 발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함.

### ③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제도의 운용이 필요

- 현행 지원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심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제도의 운용이 가능함.
- 등단 기준의 폐지나 심사위원 풀 운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래 절에서 상세히 논의함.

## 3) 개선과제

### ① 지원 방향의 전환 필요

- 변해가는 문학 환경에 걸맞은 지원제도와 젊고 도전적인 문학에 대한 지원 필요
- : 기성의 문학 질서와 장의 규범을 옹호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는가? 아니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활동과 창작정신을 지원하는가?의 양 갈래 방향에서 현재의 제도는 철저히 전자의 측면에 기울어 있음(평론가 김미정, 오혜진 등). 그래서 새로운 문학적 주체를 성장하게 하고 미래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지원제도가 필요함.

### ②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이나 정체성이 담긴 지원제도와

‘서울문학상’의 제정

- 서울은 인구 규모나 문화적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도시로서 국내 및 해외 이주민, 외국인 거주자들로 인해 점점 다문화적이 되고 글로벌리티가 심화되는 도시임. 서울의 위상과 발전상에 걸맞은 문학상(예컨대 서울논픽션문학상, 서울청년문학상, 서울노동자문학상, 서울이주민문학상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지원제도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의 독자성과 함께 서울문화재단의 브랜드가 생길 것임.

### ③ 지원대상의 다변화

- 신진과 중진을 막론한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잡지와 같은 활동 무대라 할 때, 대상을 작가들의 네트워크나 특히 새로운 지면(무크지, 독립잡지 등)으로 넓히는 것이 필요함. 기존 우수 문예지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잡지 및 종이 매체가 아닌 문학 매체(웹소설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함.

### ④ 현행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구분의 재설정

#### ④-1. 신인/기성 구분 폐지

- : 현행 제도는 신인급과 기성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나,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 근거를 대서 설명하기는 어려움.
- : 극소수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작가 거의 모두가 전업 작가로 살 수 없으며, 대체로 생계가 어려움. 작가 지망생과 기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임(소설가 임세화). 만약 청년작가(지망생)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 아예 다른 청년작가 공모전을 마련하거나 현재 청년지원사업 문학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예: ‘서울청년문학상’ 등을 신설하는 방안).

#### ④-2. 등단 기준 폐지

- 등단 매개체인 “국내 신춘문예” 및 “문학 전문 매체”의 제도적 객관성과 권위는 오래전부터 의심받아왔음. 제도 자체가 대단히 경직돼 있고(장강명, 『당선, 합격, 계급』 참조) 인터넷 등 매체와 플랫폼의 다양화 때문에 ‘등단’은 구시대적이며 의미 없는 기준이 되었음(출판전문가 정원옥). 또한 등단을 위한 문학적 기예가 문학의 본령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음(평론가 김미정 등).
- 등단 연차 기준의 폐지
  - : 등단이 기성 문학제도에의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한 문학 환경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또한 기성 작가도 등단 15년 전후로 구분하고 있으나, 작가들의 활동주기, 생애주기 등을 고려할 때 이 구분도 인위적이며 어색함.
  - : 제출서류에 “※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 정보 기재, 희곡작가의 경우 공연 정보 기재”라 하여 등단하지 않은 작가에게도 지원을 개방해놓고 있으나, 이 점을 사업 자체에 명기하지 않아서 모순이 있으며 서류 양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제출서류 양식에서 가져옴).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체를 등단 여부와 등단 연차로 구분하는 것을 폐지해야 함.

#### ④-3. ‘첫 책’과 ‘작품집’ 양 제도를 통합

- 둘로 나뉘진 사업을 통합하고 등단 여부 및 등단 연차에 관계없이 작품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할 필요.

#### ④-4. 작품집 및 집필 계획이 아니라 작가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 필요

- 능력이 검증된 작가에 대해 작가의 필요에 따라 생계와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이를 위해 작가의 필요를 고려하는 방법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⑤ 지원대상 장르 구분의 개선

- : 장르 구분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고식적임. 현재 7개(또는 10개) 장르 구분. 소설을 장편, 단편, 중편으로, 동화도 장편, 단편으로 구분. 대신 논픽션 장르(전기, 르포, 에세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 시조나 희곡 같은 실제 독서 현장에서는 거의 읽히지 않거나 타 장르 지원을 통해 가능한 부문에도 지원. 시와 시조 통합, 희곡은 연극 지원으로 통합할 필요.
- 또한 “단, 신청 장르와 기출간한 개인 창작집 장르가 일치해야 함”이라는 단서가 있음. 이해하기 어려운 등단 기준 또는 심사 편의를 위한 기준. 등단이라는 기성 제도에서의 등단 ‘증거’에 집착.
- : 실제로는 장르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작가 경력이 오래되면 시인과 평론가를 겸하는 경우, 시인이면서 동시를 쓰거나 소설가이면서 동화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됨.

#### ⑥ 논픽션 장르 지원 신설

-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 문학계·출판계에서는 문학과 사회적 의의가 뛰어난 논픽션과 르포 작품이 다수 창작되고 있음. 시와 소설에 치우친 지원은 문학장의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문학의 사회적·실천적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음(출판정책연구소 정원옥, 평론가 오혜진 등).

## ⑦ 심사 방식의 개선

### ⑦-1. 심의기준 점수의 조정 필요

- 현재 나누어진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의 하위 항목들 중에서 집필 계획의 구체성/적정성(20%), 원고의 우수성/완성도(30%), 창작집 발간의 성과(20%)가 사실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작품집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이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원고의 우수성/완성도”를 40%로 상향 조정하고 “작가의 수행 역량”을 20%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의 활동이나 인맥 등이 작용할 여지를 줄일 필요.

### ⑦-2. 심사위원 선정 방법 재구조화

- 현행 심사위원의 구성은 지나치게 동질적·반복적이어서 교체가 필요. 특정한 문학적 경향을 가진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관행을 바꾸고 젊은 작가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소설가 정용준, 평론가 오혜진 등).
- : 심사위원 구성의 매너리즘과 고루함은 문학지원제도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함(소설가 정용준). 심사위원의 다양한 풀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
-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제도를 잘 아는 중장기적 자문위원과 새로운 평가자의 조화가 필요함(시인 기혁).

## ⑧ 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경

- 청년작가에 대한 지원은 청년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현재 1천만 원 일시 지급 형식에서 분할 지급(월급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시인 기혁).

## ⑨ 기타 개선할 사항

- 작가들에게 제시될 심의기준(홈페이지 게재)에는 “사업”이라는 말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
- 심사평의 외화를 통한 피드백 방법의 개선.

## 4) 기대 효과

### ① 지원 방향의 전환 필요

- 변해가는 문학 환경에 걸맞은 지원제도와 젊고 도전적인 문학에 대한 지원.

### ②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이나 정체성이 담긴 지원제도와 ‘서울문학상’

- 서울의 위상과 발전상에 걸맞은 지원제도의 구현.
- 서울문화재단 지원제도의 차별성과 권위의 획득.

### ③ 지원대상의 다변화

- 현재 문학장의 현실과 젊은 문학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제도.
- 문학장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함.

### ④ 지원대상 및 구분의 재설정

#### ④-1. 신인 및 기성 구분을 폐지

- 작가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 제도.
- 청년문학가, 문학가 지망생을 더 격려하는 제도.

#### ④-2. 등단 기준 폐지

- 문학계의 변화를 반영.
- 작가들의 활동주기, 생애주기 등을 실제로 고려한 지원.
- 지원 기준상의 모순이나 불필요한 진입 장벽 제거.

## ⑤ 장르 구분의 개선

- 실제 시민의 독서 현실과 작가들의 분포를 반영한 현실적 지원제도.

## ⑥ 논픽션 장르 지원 신설

- 사회적 의의가 뛰어난 논픽션과 르포작품이 다수 창작되고 있는 문학계를 고려한 지원.

## ⑦ 심사 방식의 개선

### ⑦-1. 심의기준 점수의 조정

- 심사자의 주관이나 인맥 등이 심사에 작용할 여지를 줄이고 작품 중심의 선정을 가능하게 할 것임.

### ⑦-2. 심사위원 선정 방법 재구조화

- 서울의 이미지에 맞는 젊고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제도를 잘 아는 중장기적 자문위원과 새로운 평가자의 조화 필요.

## ⑧ 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경

- 청년작가에 대한 지원이 단지 예술지원이 아니라 청년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될 것.

## ⑨ 기타 개선할 사항

- 보다 작가 친화적인 심의와 피드백을 통한 지원의 신뢰성과 권위의 확보.

## 5-2. 무용 분야

### 1) 현황

#### ① 개요

- 서울문화재단 무용 분야 지원사업은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중 무용 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기준 6,903건 중 353건(5.11%),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원 중 15.7억 원(11.02%)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무용 분야 총 353건의 신청사업 중 93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8.56%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다원 장르가 7.18%로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무용 분야임.

#### ② 세부사업별 현황

##### ○ 예술작품지원

##### - 지원목적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여 예술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
- 신작 창작활동 및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

#####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당해 연도 서울에서 무용공연예술활동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한국무용(창작), 현대무용, 발레, 기타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고 5,000만 원

##### ○ 유망예술지원



- 지원목적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단체)을 다년간(2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함
- 지원신청자격
  -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 연도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2년간 지원
  - 1차 연도: 최대 1,800만 원 이내
  - 2차 연도: 최대 1,800만 원 이내
- 지원 내용
  - 전문가 멘토링 및 크리틱, 세미나, 리서치 등
  - 통합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 발표 및 연습 지원: 서울무용센터 공간/장비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지원목적: 공연장과 무용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 환경에서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무용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 연한 3년 이상의 단체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우대
    - (대상 공연장)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무료 사용 필수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단체당 최소 6,000만 원~최대 1억 5,000만 원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목적
    - 무용 분야 유망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르 간 교류 및 협업 기회 활성화
    - 예술활동 경력 및 연령 제한 없는 포괄적 지원 및 장애예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당해 연도 서울에서 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 무용 분야 창작 초연, 재공연 작품 등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
- 최초예술지원
  - 지원목적: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지원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혹은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창작준비형 200만 원 정액
  - 단년(1년) 프로젝트: 작품 구성을 위한 리서치, 워크숍 등 발표 이전 단계 지원

- 창작발표형 500만 원~1,500만 원
- 단년(1년) 프로젝트: 당해 연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작품 발표 지원
- 다년(2년) 프로젝트: 당해 연도부터 2개년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작품 발표 지원
- 서울청년예술단
  - 지원목적: 단기 예술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
  - 지원신청자격: 단년 또는 다년간 서울에서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활동비 70만 원/인
    - 사업비 최대 1,500만 원
- 청년예술공간지원
  - 지원목적: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르별 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창작활동 거점 확충 및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과 상호협력 플랫폼 제공
  - 지원신청자격: 무용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 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

## 2) 개선 방향

- ① 지원사업의 목적이 창작, 전승, 시민 향수 등 그 범위가 타 장르에 비해 유독 혼재되어 목적의 재정립과 현장의 요구를 읽어내는 연구

## 용역이 필요

- 무용 분야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현장의 변화가 근간에 생겨남.
  - 1) 시민예술과 순수예술의 혼재 2) 작품 형태의 변화
  -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혼재되어 지원 대상, 방법과 평가 부문까지 흔들리는 상황임.
  - 더불어 현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에서의 장르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보수적 장르 구분으로 지원사업 영역 안에 이를 포함시킬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
- ② 예술지원사업의 사업별 명확한 목적, 지원대상에 대해 재구조화 필요
- 시민예술지원 및 생활문화지원의 기조로 인해 비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예술인들의 활동 기회가 줄고 있으며,
- 동일한 사업에서 예술가와 시민예술가가 경쟁하는 구조가 생겨나고 예술가와 단체들은 예술활동의 존속성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례 발생.
- 청년예술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이 모호한 부분, 청년에 대한 개념이 예술적 환경에서 나이로 구분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
- ③ 예술현장을 반영한 무용 장르의 다양한 영역별 지원시스템 부재
- 보수적 현장의 프로시니엄 무대공연 중심 지원에서 거리무용, 커뮤니티댄스, 댄스필름 등의 영역을 지원하기 위한 외연 확장 필요.
- ④ 창작활동의 우위에 선 1년 단위 지원시스템의 혁신적 변화 필요
- 결과 중심의 작품지원 방식에서 과정지원, 예술가 및 단체 지원으로



시스템 변화 필요.

- 1년 단위의 사업행정 시스템에 따른 예술작품활동의 규격화로 창의적인 작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 예술가의 자기계획 가능한 지원사업 필요. 수개월 전 (약 1년 전)에 지원하는 방식 도입 구상.
- 리서치 지원, 무브먼트 지원, 텍스트 개발 지원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원 필요.

- ⑤ 청년예술지원사업의 확대에 예비 예술인과 신진 예술가들의 참여의 폭이 다양해진 반면 중견 예술가들의 제한적-배제적 환경이 만들어짐. 이에 중견 예술가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에 대한 범주 고민 필요
- 예술가로서 존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⑥ 서울무용센터의 비전과 역할, 방향성의 부재
- 해외 아티스트 오픈콜 중심의 업무에서 탈피, 지원시스템과 연계된 업무로 전문성 강화.
  - 현장과 소통하고 무용센터로의 차별화되는 커뮤니티 역할 필요.
  - 더불어 현재의 행정 인력의 과다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인원 충원 시급.

- ⑦ 작품의 제작 규모를 검토하는 예산 타당성 검토안 필요
- 안무가 역량과 작품 규모의 타당성이 배제되고 소액조건으로 지원되는 현재 지원제도의 문제.

- ⑧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공연장과의 계약 및 매칭 등 전반적인 행정프로세스를 단체가 발굴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외적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단체는 접근하기 어려움.
- 과도한 시민프로그램 운영으로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작품활동에 시간 배분 어려움.

- ⑨ 행정체계의 복잡성 문제와 예산 수립의 타당성 문제 제기
- 공연 형태의 변화에 따른 지원시스템 보완 미비, 즉 거리공연 등 장소 관련 계약 체결 문서가 없음에도 증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 지원시스템 신청 기간의 필요 행정서류인 대관계약서 제출에 따른 발급 및 신청 가능한 무용 전용 극장으로 대관이 물리는 상황. 선정 이후에 작품 성격에 맞는 극장 섭외 및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어려움 발생.
  - 예산 타당성 검토 필요. 홍보와 마케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 기획자의 활동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 없는 사례비 책정 구조의 문제(전체 지원 예산 규모상 기획·홍보 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인건비 책정이 불가한 상황). 아티스트 사례비 또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및 연습시간, 작품 시연시간을 고려한 예산 책정이 불가한 상황.
  - 지원사업의 제작비 중심의 예산 항목 구성에 따라 지원자(대표자)의 사례비 지급이 불가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운영비 구성 또한 불가한 상황.

### 3) 개선과제

- ① 무용예술 분야 현장을 읽어내는 예술지원사업의 전면 재구조화
  - 시민예술, 순수예술, 작품 형태의 변화 등 사업의 대상과 목적을 재정립하여 사업 영역으로 구축, 예술가와 지원사업 모두 성장하는 예술 환경을 조성해야 함.
- ② 예술현장을 반영한 무용 장르의 다양한 영역별 지원시스템 마련
  - 장르별·주제별(사회적 예술)로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함. 무용의 예술 영역 범주에서 무대의 작품활동으로 프로그래밍되는 영역과 사회적 예술로서 프로그래밍되는 영역 등 다양한 활동 영역에 따른 지원시스템 마련.
- ③ 무용예술 환경 혹은 작품에 따라 시간 및 행정의 제한을 1년 및 다년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확장
  - 결과 중심의 작품지원에서 과정 중심의 지원으로 예술가 창작활동주기를 고려한 지원사업 확대로 다양한 창작활동의 예술생태계 조성.
- ④ 입문-성장-안정의 생애주기별 예술가지원제도 마련
- ⑤ 서울무용센터의 비전과 역할, 방향성 재정립
  - 지원시스템과 연계된 방향성을 넘어 서울무용센터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장과 센터를 관통하는 예술감독제 도입.
- ⑥ 예술가 성장과정 지원과 예술 상품화과정 지원을 구분하여 설계 필요
  - 예술가 성장과정 지원으로는 현재의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이 전방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술 상품화과정으로서 지원은

전무한 현실. 공적인 플랫폼 성격의 홍보 및 모니터링, 아카이빙 등 재단의 새로운 역할 필요.

- ⑦ 장르별, 통합적 지원을 위한 유연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 장르별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체계 마련
    - 예술 장르 간 공동(융합)작업을 지원하는 사업 영역 필요.
- ### 4) 기대 효과
- ① 무용예술 분야 예술지원사업의 전면 재구조화로 신진, 기성, 원로 모두가 입문-성장-안정되는 예술 환경 조성
  - ② 예술의 창의성을 수용하고 일상 속의 예술을 실천하는 매개자로서 무용예술 환경의 변화 기대
  - ③ 서울무용센터의 비전과 역할의 재정립으로 무용 분야 지원사업의 허브 역할 기대

### 5-3. 전통예술 분야

#### 1) 지원 현황

##### ① 개요

- 서울문화재단 전통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중 전통예술 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기준 6,903건 중 480건(6.95%),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원 중 15.5억 원(10.90%)로 나타나고 있음.
- 전통예술 분야 총 480건의 신청사업 중 101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9.29%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다원 장르가 7.18%로 가장 낮으며 그다음으로 무용, 전통예술 분야임.

##### ② 세부사업별 현황

###### ○ 예술작품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여 예술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
  - 신작 창작활동 및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당해 연도 서울에서 무용공연예술활동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국악기악(계승/창작), 국악성악(계승/창작), 연희(계승/창작), 전통무용(계승), 작곡 발표
  - ※ 한국무용(창작)은 무용, 전통무용(계승)은 전통예술,

###### 전통공예는 시각예술로 지원신청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고 5,000만 원

###### ○ 유망예술지원

- 지원목적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단체)을 다년간(2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함
- 지원신청자격
  -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 연한 10년 이하의 예술인(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2년간 지원
  - 1차 연도: 최대 1,800만 원 이내
  - 2차 연도: 최대 1,800만 원 이내
- 지원 내용
  - 전문가 멘토링 및 크리틱, 세미나, 리서치 등
  - 통합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 발표 및 연습 지원: (1차 연도) 쇼케이스 형식의 작품 발표, 문래예술공장 공간/장비 지원, (2차 연도) 1차 연도 쇼케이스 작품 재공연 및 레퍼토리화 발표, 문래예술공장 공간/장비 지원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지원목적: 공연장과 전통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 환경에서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 공연예술단체

-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 연한 3년 이상의 단체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 (대상 공연장)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상주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 공연예술단체,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무료 사용 필수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단체당 최소 8,000만 원~최대 1억 5,000만 원

####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목적
  - 전통 분야 유망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르 간 교류 및 협업 기회 활성화
  - 예술활동 경력 및 연령 제한 없는 포괄적 지원 및 장애예술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절차 및 서류 간소화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당해 연도 서울에서 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 연희, 국악기악, 국악성악, 전통무용 등의 창작물 발표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

#### ○ 최초예술지원

- 지원목적: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지원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혹은 데뷔 10년 이하의

#### 예술인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창작준비형 200만 원 정액
- 단년(1년) 프로젝트: 작품 구성을 위한 리서치, 워크숍 등 발표 이전 단계 지원
  - 창작발표형 500만 원~1,500만 원
- 단년(1년) 프로젝트: 당해 연도 서울에서 진행되는 작품 발표 지원
- 다년(2년) 프로젝트: 당해 연도부터 2개년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작품 발표 지원

#### ○ 서울청년예술단

- 지원목적: 단기 예술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 조성
- 지원신청자격: 단년 또는 다년간 서울에서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활동비 70만 원/인
  - 사업비 최대 1,500만 원

#### ○ 청년예술공간지원

- 지원목적: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장르별 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창작활동 거점 확충 및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과 상호협력 플랫폼 제공
- 지원신청자격: 전통예술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 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1,000만 원~최대 2,000만 원

## 2) 개선 방향

### ①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의 부재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창의적인 예술활동 지원”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목적과 매우 상이하며 매년 목적이 달라진다고 인식되고 있음.
- 현장에서 공감하는 전통예술 분야의 목적은 서울문화재단의 목적과 더불어 예술가 성장과 예술생태계 마련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다작의 생산이 공감되고 있으며 이것 또한 매년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 선정되는 작품의 방향성이 바뀐다고 인식됨.

### ② 전통예술 분야의 예술지원사업은 수년간 소액다건 지원사업으로 인식, 혁신적 제도 개선 필요

- 매년 선정 작품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소액다건의 경향이 더 짙어지고 그에 따른 예산 운영의 한계는 작품으로 나타나 우수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완성적 작품으로서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의 반복으로 사업의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음.
-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지원사업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예산의 규모가 지원사업의 목적과 예술가의 자생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임.
- 선정 작품의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성의 부재는 관객의 예술활동 향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관객 개발에도 실패하는 요인이 됨.

### ③ 전통예술 분야의 현장의 변화 및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장르의 외연 확장 필요

- 현장에서는 전통예술 분야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을 넘어 뉴장르가 등장하고 있지만 전통예술지원사업의 지원 카테고리가 없으며 세부

장르로서 계속 만들어내는 현재의 시스템 보안 필요.

- 더불어 현재의 지원 장르는 예술현장의 장르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보수적 장르 구분으로 지원사업 영역 안에 이를 포함시킬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

### ④ 현재의 예술 환경 및 예술가들의 요구를 반영한 예술지원사업의 플랫폼 성격으로 기능 확장

- 타 지원기관과 비교했을 시 상대적으로 선정작을 우수작품으로서 이미지 메이킹하는 과정이 부재하다는 인식이 예술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의 경우 유통의 범위까지 확장되어 설계됨.
- 단발성 예술지원사업 이후 공연 상품화 등 확장과정에 대한 지원 부재.
- 예술가 및 기획자, 극장 관계자, 유통 관계자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 마련 필요.

### ⑤ 평가지표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예술지원사업의 성장을 위한 건설적 환류체계 재설계

- 정량적 평가 방식이 주로 이뤄지는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익명으로 실시되는 환류체계 방식의 제도 개선 필요.
- 선정 작품과 현장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 평가 및 전문가 대화 방식의 의견을 듣고 작품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환류체계 시스템 마련.

### ⑥ 청년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대상이 혼재되어 타 지원사업과의 경계 구분이 모호함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의 나이 제한 부분을 제외하면 타 지원사업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특히 작품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작품지원사업보다 많은 예산 배정에 대해 예산 타당성 검토 필요.

- 청년예술 분야 지원사업의 개념 및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⑦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상주단체지원사업은 예술단체에 다년간 지원사업의 형태만큼 중요도가 있는 사업이나 헤게모니가 극장에 있는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음.
- 공연장과 관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예술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우며, 공연장과 단체 간 협력 구조가 수평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공연장의 역할과 미션을 단체에 떠넘기는 사례 발생.

#### ⑧ 상시 상담 전용 창구 운영 필요

- 현재 예술지원사업의 안내서비스는 홈페이지와 담당 직원 두 채널로 예술가들에게 응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적 편차와 정확성, 업무 과다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님.

#### ⑨ 복잡하고 소모적인 정산시스템 문제와 예산 수립의 타당성 문제 제기

- 예술현장의 특수성 및 예술지원사업의 성격보다는 용역사업으로서 설계된 정산시스템으로 혁신적 시스템 재편이 요구됨.
- 기획자의 활동과 업무 환경에 대한 이해 없는 사례비 책정 구조의 문제(전체 지원 예산 규모상 기획·홍보 인력에 대한 적정 규모의 인건비 책정이 불가한 상황). 아티스트 사례비 또한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및 연습시간, 작품 시연시간을 고려한 예산 책정이 불가한 상황.

- 지원사업의 제작비 중심의 예산 항목 구성에 따라 지원자(대표자)의 사례비 지급이 불가하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운영비 구성 또한 불가한 상황.

#### 3) 개선과제

##### ① 전통예술 분야 예술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재정립

- 창작결과물 중심 지원사업에서 예술가와 단체가 중심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변화와 제도 마련.
  - 프로젝트성 다작 및 소액다건으로 분배되는 예술지원제도를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예술가와 단체의 자생력과 지속성에 도움되는 예술지원사업으로의 혁신적 개선안 마련.

##### ② 예술의 특수성을 반영, 예술가와 단체의 창의성을 수용하는 선택적 단년도/다년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

- 예술창작활동은 예술가와 단체의 경력에 따른 창작활동주기와 작품의 다양성이 담보되었을 때 예술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음.

##### ③ 전통예술 분야 장르의 외연 확장 및 자율 장르의 신설과 장르 간 공동(융합)작업을 지원하는 사업 영역 필요

-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장르의 확장과 정의되기 어려운 장르, 장르의 구분이 모호한 장르, 장르의 정의를 시작하는 장르 등 자율 장르의 신설 필요.
- 현재의 예술 환경을 반영하는 탈장르화 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의 사업지원 필요.

- ④ 플랫폼 성격의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 모델 제시
- 제작 중심의 프로덕션형 예술지원사업에서 제작과 유통의 범주를 아우르는 마켓 중심의 플랫폼 성격으로 지원사업의 기능을 확장하여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 모델 제시.
  - 사업설명회, 선정 작품의 공감의 장, 성과발표회, 작품 성장을 위한 예술가들의 네트워킹 등 현장과 지원기관 상호 간 소통하는 예술지원 플랫폼으로 지원사업 재설계.

구분	~에서	~으로
지원의 중심	결과	과정
지원 형태	프로젝트	예술가·단체
	기금 지원	자생력·지속성 지원
	다작과 소액다건	선택적 단년·다년
지원 장르	보수적 장르 / 장르 속의 장르	외연 확장 / 자율 장르 신설
지원 성격	제작 중심의 프로덕션	마켓 중심의 플랫폼

- ⑤ 예술생태계와 예술지원사업의 성장을 위한 환류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실시
- 지원기관, 예술가,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류체계 설계를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전문 연구 실시.
- ⑥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재구조화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인큐베이팅 관련 제도 도입 방안 마련.
    - 멘토링, 쇼닥터, 매칭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큐베이팅 제도 마련으로 중견 예술가들이 투입되고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구조로 변화.

- ⑦ 공연예술현장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 협업하는 거점으로서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의 변화
- 시민예술/창작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상호 간 업무협력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성장.
- ⑧ 예술지원사업 통합안내서비스 창구 개설
- 지원 방법, 사업과정 중의 Q&A, 홍보, 마케팅, 정산 매뉴얼 등 사업 전반의 안내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상시 상담 창구 개설.
- ⑨ 운영(진행)비 항목 개설과 대표자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 전체 사업 예산액의 3~5% 내외의 운영 예산 인정과 대표자 인건비(사례비) 지급 기준 마련.
- 4) 기대 효과
- ① 서울문화재단의 철학과 가치 등이 재수립되고 공유되며 나아가 예술생태계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 마련
  - ② 예술의 창의성을 수용하는 지원시스템 개편으로 창의적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시스템으로의 이미지 제고
  - ③ 플랫폼 성격의 “서울형 예술지원사업”을 제시함으로써 “서울 스탠다드”로 이미지 제고



## 5-4. 연극 분야

### 1) 현황

#### ① 개요

- 서울문화재단 연극 분야 지원사업은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유망예술지원,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중 연극 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기준 6,903건 중 1,211건(17.54%),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원 중 38.8억 원(27.13%)으로 나타남.
- 연극 분야 총 1,211건의 신청사업 중 177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16.28%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시각예술 26.8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예술작품지원사업 기준 연극 분야 선정사업별 평균 지원금은 2,480만 원으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② 세부사업별 현황

##### ○ 최초예술지원

- 지원목적: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지원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혹은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창작준비형 200만 원 정액
- 창작발표형 500만 원~1,500만 원

##### ○ 서울청년예술단

- 지원목적: 단기 예술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함
- 지원신청자격: 서울에서 지속적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활동비 70만 원/인
  - 사업비 최대 1,500만 원

##### ○ 유망예술지원

- 지원목적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단체)을 다년간(2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함
  - 연극을 통한 다양한 내용적·형식적 실험 기회 제공
- 지원신청자격
  - 최소 3개 이상의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연출가
  - 최소 2개 이상의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극작가

- 지원 방식 및 규모: 2년간 지원

- 극작가 연도별 800만 원 정액 지원
- 연출가 연도별 최대 2,000만 원 이내

##### ○ 예술작품지원

- 지원목적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여 예술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



- 신작 창작활동 및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서울에서 연극작품 발표를 계획한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인형극, 아동극, 뮤지컬, 기타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고 5,000만 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지원목적: 공연장과 연극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 환경에서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서울 소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연극 분야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공연예술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 연한 3년 이상의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단체당 최소 6,000만 원~최대 1억 5,000만 원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목적
    - 연극 분야 유망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르 간 교류 및 협업 기회 활성화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서울에서 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또는

-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 연극 분야 창작 초연, 재공연 작품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

## 2) 개선 방향

### ① 연극창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 개발

- 연극은 예술지원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장르 중 하나로서,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연극창작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직·간접 지원수단을 개발해왔음.
  - 대학로 연습실, 남산창작센터 등 공공연습실 조성 및 지원
  - 민간 창작공간(연극 연습실) 운영 지원
  - 서울연극센터 조성, 연극정보서비스·관객 개발·웹진 연극인 운영
  - 남산예술센터, 삼일로 창고극장 등 공공극장 기반 창작극 제작, 민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청년예술, 유망예술, 예술작품,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등 생애주기별 연극 창작 지원
- 타 지원기관과의 차별성, 지원제도의 구성적 완결성
  - 서울문화재단 연극지원사업은 서울연극센터를 비롯한 창작공간 및 지원시설과 창작지원금을 연계하여 직접 지원·간접 지원 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다양한 종류의 지원사업을 예술가·단체의 경력 단계별 특성에 맞춰 재설계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원제도의 구성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 타 지원기관과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연극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

### ② 정책 및 지원제도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2008년 전후, 예술지원제도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협력형

체계로 전환되어 지역 문화재단 지원정책의 상위기관 종속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공연예술단체 다년간 지원사업 시범 운영(2014년~2016년)
-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사업 민간 공연장 참여 지원
- 남산예술센터 상주극작가제도, 서울연극센터 10분 희곡 페스티벌 등 희곡·극작가 발굴 지원
- 연습실 및 작업실 등 민간 창작공간 운영지원제도 도입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 예술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및 지원제도 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

### ③ 예술지원 재정 불안정성, 지원사업 효과성 위축

- 연극 분야의 다양한 지원수단 개발, 지원제도의 구성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 문화재단 지역협력형 체계 전환 이후 서울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배분율이 2009년 40%에서 2018년 10% 규모로 연도별로 점감해왔고,
  - 2017년부터 본격화된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양적 팽창 대비, 기성 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총량은 정체됨으로써 신진·중견 지원 재정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 예술지원 행정체계 복잡성 증가, 지원사업 전담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제도 운영 안정성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

### ④ 공급자 관점, 예술현장의 창작활동 패턴과 맞물리지 못하는 지원제도

- 1년 주기 정기공모, 소액다건 중심 지원체계
  - 공급의 측면에서, 현행 예술지원사업의 대부분은 1년 주기의

정기공모 형식을 통한 단년도 지원, 사업별 소액다건 중심의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반면 이용자 측면,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은 작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구상, 연습, 발표에 이르는 시공간적 조건이 다양하고 예술시장의 구조적 영세성에 따라 제작비용의 자체 재원 부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예술현장은 어쩔 수 없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의 행정 패턴에 창작활동주기를 맞추다보니, 예술생태계의 자율적 리듬이 흐트러지고 지원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과 더불어 예술작품의 불완전 공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 복잡성은 늘어나고, 접근성은 떨어지는 지원사업 행정체계

- 지원신청서 항목의 중복성, 불필요한 정보와 항목, 행정처리 절차의 복잡성.
- 지원사업 관련 행정서식의 용어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원기관과 신청 예술인·단체와의 관계 설정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예술현장과 소통이 용이하도록 친근하고 절차적으로 간결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

### ⑤ 소통과 협치, 제도 운영의 방법론이 아닌 제도 자체로 설계되어야 함

- 정책과 지원제도 역시 한정된 자원, 제한적 틀 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지원사업의 내용적 설계만으로 예술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음.
- 한정된 조건 내에서 지원제도의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술현장과 지원기관 상호 간의 자율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 공모와 심사의 정형화된 관계성을 극복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지원제도로써 협치·거버넌스를 전제하고 상호 간 동료의식을 가지고 함께 설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⑥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

-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은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공공) 공연장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향유 확대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음.
- 그간의 성과와 다양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복합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은 제도의 변동성이 크고 지원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함께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수평적·협력적 관계에서 장기적 전망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 여타 지원사업과 비교해볼 때, 지원금 규모 및 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활성화, 민간 공연장 운영 역량 강화, 민간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지역 문화향유 확대 등의 복합적 정책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추진체계를 효과적으로 재편할 필요.

### 3) 개선과제

#### ① 예술지원사업 운영 기조 개편

- 현재 예술지원사업은 단년도 지원, 예술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프로젝트 중심 소액다건 지원 방식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운영기조는 예술창작활동을 규격화하고 예술현장의 지원사업 의존도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예술계의 자생력 확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공급과 보조 관점의 분절적 예술지원제도’를 기반 조성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한 ‘생애주기별 포괄적 지원제도’ 방식으로 전환.

~에서	~으로
· 단년도 지원 · 창작결과물/작품 중심 지원 · 경력과 무관한 단일트랙 지원	· 다년간 지원 · 예술가/예술단체 대상 포괄적 지원 · 경력 단계 및 생애주기별 지원

- 예술지원사업 운영기조 개편 방향.
- 지원사업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예술가 펠로십 지원, 프로젝트 지원
- 이러한 방향에서 정기공모 예술작품지원사업 중 연극 장르를 중심으로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 지원 방식을 공연단체의 종합적 예술활동 계획에 대해 3년 내외의 다년간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아울러, 시각예술 및 문학 분야는 창작결과물이 아닌 작가의 예술 경력 및 기여도, 향후 창작활동 계획 등을 심의하여 2년 내외의 시상금 형식 펠로십 지원제도 확대, 아티스트 피(fee)·재료 구입·작품 취재 비용 등을 창작활동 필요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 유망예술지원사업과 공연단체 다년간 및 예술가 펠로십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술가·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전체 지원사업 중 ‘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예술창작활동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한 비율의 포트폴리오로 재구조화함.

구분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예술가 펠로십 지원	프로젝트 지원
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공연예술 장르	· 문학, 시각예술	· 모든 장르
지원 방식	· 3년간 지원 · 작품 제작 경비 및 인건비, 경상비 등 단체 운영 비용 통합 지원	· 2년간 지원 · 시상금 형식	· 다년간 및 펠로십 지원에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젝트형 사업(기존 예술작품지원사업 보완 유지) · 청년, 유망 등 관련 사업

- 개편된 지원사업 구조(예시).

## ②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개선

○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공연 주체들이 공존·협업하는 창작 플랫폼

- 공연장상주단체를 문예회관 및 공연단체 간 지원사업 모델로 한정짓지 말고, 문예회관·시립 공연단체·민간 공연장·민간 공연예술인 및 단체·지역사회 구성원 등 공연예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류, 협업하는 확장된 제도로 재설계.

· 예시1) 자치구 문예회관+서울시립극단+민간 극단  
자치구 문예회관, 세종문화회관 상호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립 공연단체의 문예회관 상주 모델 개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민간  
공연단체(상주단체) 참여 특정 공연장르 특성화를 목적으로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 예시2) 세종문화회관+민간 공연단체+시립 공연단체  
세종문화회관 공연시설 중 M시어터와 S시어터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 공연단체와 상주단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립 공연단체와의 창작 교류, 공동 창작·제작의 기회 제공.  
공공 및 민간 공연장, 공연예술단체 간 다층적 창작 플랫폼  
시도.

· 예시3) 민간 공연장+민간 공연단체+지역사회 구성원  
민간 부문 공연예술 주체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상주 모델.

공간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상주단체 관점에서 탈피,  
지역성·관계지향성·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

○ 다년간 지원, 민간 공연장 참여, 비상주 협력 모델 개발

- 단년도 지원사업에서 다년간 지원사업으로 복원. 사업 참여 주체  
간 동기 부여 및 중장기 목표 설정, 구현이 가능하도록 최대 3년간  
지원 방식 고려.

- 민간 공연장 사업 참여 구조 마련. 상주단체 사업 추진 역량이  
입증된 민간 공연장의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자치구 문예회관 및 민간 공연장 협력형 상주단체 운영  
모델도 검토해볼 필요 있음.

- 비상주 모델의 수용. 상주하지 않는 상주단체 모델, 상주단체의  
개념을 물리적·공간적 상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활동의  
협력적 관계로 바라볼 필요 있음.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단체 중 사무실, 연습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경우 문예회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사용 강제하기보다 지원금을  
상주단체 사업 참여 목적으로 사무실, 연습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 ③ 개방적 공유공간으로서 플랫폼의 조성 및 지원제도의 시너지 효과

○ 궁극적으로 올바른 지원체계는 예술계의 자생력과 지속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 현재까지의 예술지원체계는 궁극적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자생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 예술지원체계의 개편은 예술계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연극 장르의 경우, 자생적 창작 환경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은 공간의 문제.
- 작품을 구상하고, 연습, 실험, 창작 발표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개방공간·공유지로서의 플랫폼이 조성되고 활용될 수 있다면, 지원제도가 예술가·단체의 책임의식과 자생력을 북돋워주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5-5. 음악 분야

### 1) 현황

#### ① 개요

- 서울문화재단 음악 분야 지원사업은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유망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중 음악 분야 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6,903건 중 878건(12.72%),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중 21.3억 원(14.89%)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음악 분야 총 878건의 신청사업 중 130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14.8%로, 평균 지원금은 1,630만 원임.
- 무용, 전통이 신청 건수 대비 선정자 수가 약 4:1의 경쟁률이라면 음악 부문은 약 6:1 경쟁률을 보임. 이는 타 장르에 비해 경쟁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평균 지원금은 무용, 전통과 소액의 차이가 발생함.

#### ② 세부사업별 현황

##### ○ 예술작품지원

- 지원목적: 음악 분야의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육성하여 예술인/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 신작 창작활동 및 공연의 레퍼토리화를 위한 재공연 지원
- 지원신청자격: 2019년 서울에서 공연예술활동 발표를 계획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음악 지원 장르: 기악(실내악), 기악(관현악), 기악(독주),

성악(합창/중창, 제창 포함), 성악(오페라), 성악(독창), 작곡  
발표, 기타

- 지원 방식 및 규모: 최소 500만 원~최고 5,000만 원

※ 2018년 평균 지원금: 음악 1,100만 원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지원목적: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 안정적 창작 환경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작품 제작 발표 촉진
    - 공연장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확대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음악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단체 소재지의 제한은 없으며, 설립 연한 3년 이상(2016년 이전 설립)의 공연예술단체
    -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체당 연간 최소 6,000만 원~최고 1억 5,000만 원
- ※ 2018년 평균 지원금: 음악 1억 200만 원

#### ○ 유망예술지원

- 지원목적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단체)을 다년간(2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함
- 지원신청자격: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한 데뷔 혹은 설립 연한 10년 이하(2010.01.01.)의 예술인(단체)

- 음악 지원 장르: 음악/사운드

- 신작: 관객 대상 공연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 재창작: 기존 작업의 현격한 업그레이드 작품(각색/재구성) 혹은 연속성을 지닌 시리즈물

- 지원 방식 및 규모: 2차 연도, 각 연도에 최대 1,800만 원 이내

####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목적: 유망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음악 분야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예술활동 경력 및 연령 제한 없는 포괄적 지원
- 지원신청자격: 서울에서 예술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의 장애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규모: 500만 원~1,500만 원

#### ○ 최초예술지원

- 지원목적: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
  - 지원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예술인
  - 지원 규모: 직접 지원(예산) 200만 원~1,500만 원
- ※ 2018년 평균 지원금: 음악 10,033,000원
- 지원 내용: 창작준비형/창작발표형(단년 프로젝트, 다년 프로젝트)

#### ○ 서울청년예술단

- 지원목적: 단기 예술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함
- 지원신청자격: 서울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규모: 직접 지원(예산) 최대 6,540만 원  
※ 2018년 평균 지원금: 음악 10,033,000원
- 지원 내용: 단년 프로젝트, 다년 프로젝트의 활동비 및 사업비

## 2) 개선 방향

### ① 서울문화재단 지원체계 철학 필요

- 서울문화재단만의 지원체계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 가치, 미션 재설계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상위기관의 정책에 의해 신규 지원사업이 생겨나거나 예산이 대규모로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 현장에 해당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안내 및 공유, 재단의 입장과 방향을 공표할 필요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서울시 기초문화재단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 가치, 미션이 정립될 때, 이는 다른 문화재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임.

### ②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사업 공간 매칭 및 협력

-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하는 공간(공연장) 풀이 있어서,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선정사업이 해당 공간과 매칭되어 선정 작품의 공연을 해당 공간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사업 개발 필요.
- 클래식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간인 예술의전당의 경우, 대관 경쟁이 심해 지원사업 신청 한참 전부터 대관을 미리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지원사업에 선정될 줄 알고 미리 대관 신청을 해두었다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대관료를 이미 지불해서 공연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함.
- 서울시에 존재하는 공연장 DB 구축 및 맵핑이 필요. 이를 자료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작품 및 연주회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③ 지원사업 모집 및 선정 시기 개편

- 지원사업 모집 및 선정 시기와 주요 공연장 대관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공간 대관 시 어려움이 있음. 특히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한 공연장은 1년 전부터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지원사업 선정의 불안정성을 갖고 공연장 대관을 미리 진행해야 하고, 영세한 예술단체의 경우 대관료 선급금 지급도 쉽지 않은 단체도 있음.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고, 실제 사업 기간 내의 환경에서는 기획을 수정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함.

### ④ 지원사업 심사기준 선명화 및 세부 장르 선정에 대한 기준 필요

- 음악의 경우, 신청 분야만 해도 1)기악\_실내악 2)기악\_관현악 3)기악\_독주 4)성악\_합창 5)성악\_오페라 6)성악\_독창 7)작곡 발표 8)기타로 구분됨. 해당 세부 장르별 심사위원 배정과 선정기준이 필요.
- 지원사업 연속 선정 기준 필요.
- 기존에 정립된 음악 세부 장르의 구분 검토 필요.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음악 및 멀티미디어 음악 증가 추세.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위에 언급된 세부 장르 외 재즈, 월드뮤직, 인디음악 등의 타 장르 뮤지션이 선정됨.
- 최초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음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재즈, 인디, 월드뮤직까지 선정되나, 음악계 현장에 해당 사업 내용이 일부 노출. 최초예술지원에서의 음악 세부 장르 확대가 기성 지원사업에도 적용될 것인지 등에 대한 장르 구분과 선정기준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 있음.

#### ⑤ 현장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재설계

-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실제 예술가 및 단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공연을 적극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할 필요.
- 매해 서울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작품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

#### ⑥ 지원사업 선정 작품의 통합 홍보·마케팅 강화

- 서울문화재단 선정 작품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 및 SNS를 통해 공연 홍보를 해주기는 하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임.
-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전문적으로 일하는 홍보·마케팅 인력이 상주하는 것이 아닌 환경이기 때문에, 홍보·마케팅 부문에 있어서 늘 아쉬움이 존재. 매체와 DB를 보유한 서울문화재단에서 당해 연도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및 운영이 필요함.

#### ⑦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 기획자, 홍보·마케팅, 하우스 매니저 등의 협력 스태프가 없는 예술가·예술단체들이 많음. 실제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설계-기획-운영-정산의 단계에서 상시 문의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관리 통합서비스센터가 필요.

#### ⑧ 서울형 문화순회사업 도입

- 문화순회사업의 경우 대부분 서울을 제외한 문화소외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오히려 서울의 도심권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에서는 클래식이나 문화를 접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곳도 있음.
- 서울시의 유희공간, 학교 등의 공간을 활용한 서울형 문화순회사업

개발 제안. 유희공간 활성화 및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생각하는 관객들이 클래식을 쉽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경험 확대 중요.

#### 3) 개선과제

##### ① 서울문화재단의 철학/가치/미션 재수립 및 공유

- 중앙과 구분되며, 서울문화재단만의 차별성이 체감되는 서울문화재단만의 철학/가치/미션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
- 중앙 상위기관 및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지원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문화재단의 방향과 현황을 현장과 공유

##### ② 음악 부문 지원사업 공모 및 심사제도 개편

- 1년에 1회 정기공모 시기 개편
  - 정기공모 상/하반기 2회 진행
  - 현재 정기공모 유지/수시공모 진행
- 음악 부문 세부 장르 구분 개편 및 기준 제시
  - 세부 음악 장르 구분 검토 및 세부 음악 장르 심사기준 제시
  - 음악 부문 심사위원 구성 시, 세부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심사위원 선정
  - 심사 결과 공개 시 세부 장르 명시, 장르별 공모 및 선정 통계 제시

##### ③ 재단 지원사업 - 서울시 공연장·창작공간 매칭 및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선정 작품 - 서울시 산하 공연장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매칭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산하 공연장 및 창작공간 풀 구축



- 서울시 내 공연장 풀 구축
  -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공연장 및 협력 공연장 MOU 진행,  
시즌별 서울문화재단 선정 작품 공간 할당제 운영
- ④ 재단 지원사업 관리 통합서비스센터 운영
- 재단 지원사업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 상세 안내와 교육이 가능한 통합서비스센터 운영
  - 재단 선정 작품 홍보·마케팅 강화
  - 지원 창작물에 대한 리뷰와 비평 담론의 활성화, 재단 선정 작품  
환류체계 재설계
  - 재단 선정 작품 연간 아카이브 구축, 해당 작품을 통한 재단  
지원사업의 동향 파악
- ⑤ 지원 창작물에 대한 리뷰와 비평 담론의 활성화
- 사업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 작품의 질적 수준, 트렌드, 관객 반응  
등에 대한 전문 리뷰와 비평 정보 제공
  - 관객과의 대화, 비평가와의 대화를 통해 창작물이 공개적으로  
토론되고 비평의 정보가 차기 창작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⑥ 서울문화재단 선정 작품의 유통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예술 수요 파악: 예술 장르별, 지역별, 취향별, 예술 경험의  
용도별 수요 조사
  - 서울문화재단 선정 우수작품이 서울시 소재 지역문화센터,  
창작공간, 아트센터 등에서 재공연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4) 기대 효과

- ① 동시대 음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사업 체계 마련
- ② 음악 장르 세부 분야 조정 및 개편을 통한 선정 작품의 다양화 및  
공정화
- ③ 지원사업과 연계한 공간사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의 통합지원을  
통한 성과 구축 및 아티스트 만족도 향상
- ④ 선정 작품의 사후 유통 활성화를 통한 우수 레퍼토리화 가능

## 5-6. 시각예술 분야

### 1) 현황

#### ① 개요

-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창작 작업실·연습실지원, 예술축제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체 지원사업 중 시각예술 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기준 6,903건 중 1,947건(28.21%),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원 중 20.4억 원(14.32%)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각예술 분야 총 1,947건의 신청사업 중 292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26.86%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예술작품지원사업 기준 시각예술 분야 선정사업별 평균 지원금은 702만 원으로 문학(640만 원)에 이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과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자들은 타 장르 대비 가장 많으나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으로 지원자 수는 많지만 전체적인 지원액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② 세부사업별 현황

##### ○ 예술작품지원

- 지원목적
- A. 우수한 작품 창작 및 기획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각예술 창작 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 강화 도모

##### -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 과거 1회 이상 개인전(학위 청구 졸업전시 제외)을 수행한 작가(팀)
  - ※ 팀(작가 2인 이상)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표자’ 격의 구성원 개인이 ‘개인전’으로 지원해야 함
- 기획전/단체전:
  - 과거 2회 이상 전시기획 실적이 있는 기획자(혹은 기획단체)
  - 과거 2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시각예술단체
  - ※ 단체전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시각예술단체만 지원할 수 있음
  - ※ 공간 및 단체(소속 직원 포함)가 연간 자체 진행하는 사업(기획전 및 개인전) 중 1개 전시만 신청 가능
  - 단, 공간 및 단체에 속한 큐레이터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는 신청 가능

##### B. 2019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사업

- 개인전: 작가가 2019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개인전
- 기획전/단체전: 기획자 또는 시각예술단체가 2019년 서울 소재 공간에서 발표하는 기획전/단체전
  - ※ 기획자가 진행하는 1인 작가의 전시는 기획전으로 지원신청
  - ※ 단순 연례행사, 전시 없는 심포지엄,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 지원 규모

- 개인전: 최소 500만 원~최고 1,000만 원
- 기획전/단체전: 최소 500만 원~최고 3,000만 원

##### -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심의 대상 관련
- 동일 지원신청 주체(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는

‘예술작품지원사업’ 내 1개 장르만 신청 가능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 공간, 사립미술관)’ 사업으로 선정된 공간 운영 주체는 중복 지원 불가

※ 단,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 지원 단체에 속한 큐레이터가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전시는 신청 가능

#### ○ 유망예술지원 99°C

##### - 지원목적

-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망 예술인(단체)을 다년간(2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함

##### - 지원신청자격

-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2010.01.01. 이후 데뷔) 예술인

※ 데뷔는 첫 개인전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 청구전은 제외함  
기존 작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작업 변화 및 도약을 계획 중이며 2차 연도(2020년 11월 이내) 개인전에서 신작 발표가 가능한 예술인

※ 1차 연도(2019): 쇼케이스 전시(2019년 11월 예정) 참여 필수

※ 2차 연도(2020): 서울 소재 공간에서 개인전(2020년 11월 이내) 개최 필수

- 최소 2회 이상의 작품 발표 경력이 있는 데뷔 10년 이하 극작가

##### - 지원 규모 및 방식: 3건 내외 / 다년간(2년) 지원

##### - 지원 내용

- 작품지원금: 800만 원~1,000만 원 이내

##### · 1차 연도

창작지원금(작품 제작 지원비): 800만 원~1,000만 원 이내

작품 개발 지원: 전문가 크리틱, 1:1 워크숍, 세미나 등

전문가 평가(리뷰) 지원

쇼케이스 개최 비용 지원

##### · 2차 연도

창작지원금(작품 제작 지원비): 800만 원~1,000만 원 이내

전문가 평가(리뷰) 지원

개인전 지원: 공간 또는 대관료 지원, 홍보 지원, 작품 사진

촬영 등

##### - 유의사항

- 기존 유망예술지원 선정자(단체) 및 재단 내 타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단체)의 중복 선정 불가(단, ‘창작 작업실·연습실지원’은 중복 선정 가능)

- 동일 작품으로 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공연장 등)에 선정된 예술인(단체)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지원 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사업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 지원신청 시 대비 총 사업 규모가 50% 초과 축소될 경우 지원금 변경될 수 있음

- 교부 후 사업성과를 위한 모니터링 진행(일정 및 형식은 선정자 간담회 시 공지) 참여 필수

- 1차 연도 성과 평가를 통해 2차 연도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삭감될 수 있음

#### ○ 예술가지원사업

- 개인 예술가의 역량과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독창적 창작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 - 지원목적

-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 작가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지원

#####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사업(발간 시 ISBN 등록 필수)
- 작가 본인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연대기별, 주제별 등) 수록한 작품집 발간(개인전 도록은 해당하지 않음)  
※ 내실 있는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출판사, 기획자, 평론가 등)와의 협업을 권장

##### - 지원신청자격

- 첫 개인전 이후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작가  
2004년 이전 첫 개인전 개최 필수  
지원신청 주체는 작품집의 작가 당사자여야 함  
※ 작고한 작가의 작품집 또는 생존 작가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기획자/출판사 명의의 지원신청은 불가

##### - 지원 규모

- 1,000만 원 정액 지원(※ 시상금 방식으로 지급)

##### - 유의사항

- 예술가지원사업(문학 첫 책/창작집,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 지원목적

- 국내 예술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서적 발간을 통해 우수 예술작품 창작의 장기적 기반 조성

#####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품집 발간이 가능한 사업  
발간물 기준으로 최소 200쪽 이상의 분량이어야 함(목차 등 제외)

#####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본인 학위논문집,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연구 작업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작품집, 다수 연구자 저술모음집, 잡지 등

##### - 지원신청자격

- 서울에 거주하며, 지원대상 장르에 대한 연구, 활동을 정리하여 서적을 발간하고자 하는 개인

- 2인의 공동연구, 집필은 신청 가능(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제출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 집필자 정보 명시)

- 3인 이상의 공동연구, 출판사 명의의 신청은 불가

##### - 지원 규모

- 1,000만 원 정액 지원(※ 시상금 방식으로 지급)

##### - 유의사항

- 예술가지원사업(문학 첫 책/창작집,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동일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타 지원기관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

#### ○ 청년예술지원

-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지원시스템으로,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

#### ○ 최초예술지원

- 지원목적: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다양한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지원신청자격: 공공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39세 이하, 혹은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인
- 세부 요건  
데뷔는 첫 전시(개인전, 단체전, 기획전)를 기준으로 하며, 학위 청구전(졸업전시 등)은 제외함  
※ 기획자는 본인이 기획한 첫 전시를 기준으로 함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창작준비형 200만 원 정액
  - 창작발표형 500만 원~1,500만 원
- 유의사항
  - 개인 예술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프로젝트팀의 경우 '대표자' 격의 구성원이 개인으로 신청
  - 서울예술단(구성원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 간 중복 선정 시 택일 필수
  - 최초예술지원 및 서울청년예술단(구성원 기준) 두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다년 지원 유형의 경우  
다년(2019~2020년) 기간 내 상기 제시하고 있는 지원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예술인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1차 연도 및 2차 연도에 대한 선정 횟수를 각 1회로 간주함

#### ○ 서울청년예술단

- 지원목적: 단기 예술 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직·간접 지원으로 예술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함

- 지원대상: 단년(2019년도) 또는 다년(2019~2020년)간 서울에서 실행될 예술창작활동 및 프로젝트
- 지원신청자격: 서울에서 지속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한 35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및 2년간 지원 병행
  - 활동비 70만 원/인
  - 사업비 최대 1,500만 원

#### ○ 청년예술공간지원

- 지원목적: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예술창작활동 거점 확충 및 청년예술인(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과 상호협력 플랫폼을 제공함
- 지원대상: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 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신청자격
  - 최소 1년 이상(2018.01.01. 이전 설립 또는 운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공간
  - 서울시 소재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상 2019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단체 대표자, 법적 증빙서류의 대표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청년예술인(단체) 대상 대관료를 50% 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간(최소 30일 이상)
  - 청년예술인(단체)과의 협력 및 연계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자체기획형에 한함)
  - 동일 공간의 연속 선정은 3회까지 가능

- 지원 규모
  - 자체기획형: 공간 운영비 및 사업 운영비 2,000만 원~5,000만 원
  - 발표공간제공형: 공간 운영비 2,000만 원 이내
- 창작 작업실·연습실지원(구 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사업)
  - 지원목적
    -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및 창작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서울시 소재의 공간을 월세로 임차해 창작공간(작업실, 연습실)으로 운영 및 사용한 민간 예술단체 또는 2인 이상의 예술인
    - ※ 공간 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공유 사무실, 시간/월 단위 대여 전문 연습실 등) 및 1인 예술인이 사용하는 창작공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공간을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창작 작업 및 연습을 목적으로 2인 이상 예술인이 사용 및 운영
    - 사업 기간 내 잔여 임대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명과 지원사업 신청인명(단체 대표자, 법적 증빙서류의 대표자명)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고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 및 사용
    - 동일 예술인 및 단체의 연속 선정은 3회까지 가능
  - 지원 방식 및 규모
    - 1개소당 6개월의 순 임차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부가세, 관리비 제외한 순 임차료)
    - 순 월임차료가 200만 원인 공간의 경우, 6개월분 총임차료

- 1,200만 원 중 1,000만 원 지원
-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 지원목적
    - 시각예술 분야 유망 장애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
    - 장애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장르 간 교류 및 협업 기회 활성화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서울에서 작품을 발표할 만 19세 이상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 시각예술 작품의 전시 및 발표
  - 지원 방식 및 규모: 단년도 지원, 최소 500만 원~최대 1,500만 원
- 예술축제지원사업
  - 대표예술축제 / 우수예술축제
  - 지원목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문 예술축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제고 및 활동 기회 확대
    - 축제 관람 및 참여를 통한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
    -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문 예술축제조직위원회 및 예술단체
  - 지원 방식 및 규모
    - 대표예술축제: 3년 연속 지원, 5,000만 원~3억 원
    - 우수예술축제: 다년 지원, 1,500만 원~5,000만 원

## 2) 개선 방향

### ○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구축

-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따른 동시대 미술의 창작 방식과 순환체계 변동.
- 동시대 미술 환경에서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체계가 새로운 어젠다 수립에 실패하고 단순 기금 분배 사업으로 전락하였음.
- 지식정보 플랫폼으로서 동시대 미술의 생산 유통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지원.
- 지구온난화, 난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정치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 인식.
- 이동하는 예술가들의 급증으로 국제 교류 확대와 네트워크 확장.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원제도에서 검열과 정치적 배제의 논리를 넘어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제도 운영.

### ○ 기존 지원제도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개선

- 서울문화재단의 시각예술 분야 지원제도는 국내 타 문화예술 지원기관과 비교할 때 세밀하고 구체적인 체계를 갖고 있음.
- 다만, 지원사업체계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지원사업 상호 간 유기적인 환류를 통해서 현장예술인 중심으로 소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사업체계 개선 이전에 지원사업을 다루는 태도와 실무자의 역량이 중요.
- 지원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예술가 응대 CS교육 실시.
- e나라도움 같은 관료적인 정산시스템을 폐지해서 시각예술가들의 자율성을 강화해줄 것.
- 시각예술 분야 소액다건 위주의 지원정책을 선택과 집중으로 고액 지원 및 다년도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 필요가 있음(시각예술 워크숍).

### ○ 창작활동의 생태계 중심 지원

- 작업실 임대료 및 공동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 생산 생태계 지원.
- 현재 공동작업실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술인 생활지원사업과 연계(예술인 창작, 거주 연계 지원) 확대.
- 지자체별 예술인 주택 보급,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연계 정책 수립.
-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 다목적 공용 전시, 공연 공간 조성 또는 예술인 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진.
- 창작활동 생태계 지원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 성과 검토.
- 현재 회화작가 공동작업실 위주의 지원에서 유희공간 활용 공동작업실 확대.
- 판화공방, 공동 조각작업실 등 작업실 설비를 갖춘 민간 예술공방 연계사업 확대.
- 예술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체계 수립(서울예술인 플랜 2016).
- 아티스트 피(작가 창작활동비 및 기획자 활동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고안 제고.
- 시각예술 분야 많은 지원사업들이 성과 위주(전시)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시 풍년임.
- 예술가들의 학습과 과정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함.

### ○ 민간 운영 창작 발표 공간 확충

- 대안 공간, 신생 공간 등 민간 운영 창작 발표 공간 지원.
- 민간 운영 창작공간의 지역 매개활동 강화(워크숍, 세미나 등 매개 프로그램 지원).
- 민간 운영 창작 발표 공간의 특성을 살리는 지원.



- 신생 공간 운영 주체 간 네트워크 확대(상호협력사업, 교류 프로그램 확대).
  - 민간 창작 발표 공간의 유형별 지원체계 수립.
  - 민간 운영 창작 발표 공간별 동시대 미술 의제 마련 워크숍 세미나 운영.
  - 서울청년예술단 연계사업의 경우 민간 운영 창작 발표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의무적으로 연결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에 충돌이 생길 수 있음).
  - 공간 운영도 기획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요 콘셉트를 존중하는 공간지원 필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개발
- 최초예술지원이 단순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가가 아니라, 기존의 지원제도 바깥의 새로운 실험을 하는 작가를 발굴하는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 최초예술의 실험의식, 참신성을 기초로 하는 지원체계 수립.
  - 중견작가 대상 작품집 발간지원사업 지속, 비평체계 확대.
  - 중견작가 대상 중형 개인전 지원사업 마련(국공립미술관 개인전 체계와 협력).
  - 원로작가 및 작고 작가 미술사 연구 및 회고전 지원체계 수립.
  - 미술시장에 경도되지 않고 실험적인 작업을 지속한 원로작가 발굴.
- 창작지원체계의 환류시스템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 전문가 비평 모니터링 체계 마련(책임 심의제와 연동된 비평체계).
  - 일반인 중심의 모니터링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중심의 비평 모니터링 체계 수립.
  - 감시하고 감독하는 차원의 모니터링이 아니라, 지원하고

- 알려주고(홍보) 읽어주는(비평) 모니터링 제도 운영.
- 재단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포함된 비평글 수록(비평집 발간, 재단 내 웹진에 수록).
- 동시대 미술의 창작활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재단 이미지 제고.
-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업의 성과와 가치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단 홈페이지 혹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사업 진행과정 혹은 결과 공유.
- 시각예술 분야 지원사업 비평집 발간(전문 비평가 중심의 비평환류 기획단 운영).
- 미술시장에 대해 공공기금 운영에서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음.
- 시장 갤러리, 혹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장터 사업과 같이 미술유통시장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년예술단 지원사업과 같은 과정형, 학습형, 예술가 주도형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좋음(시각예술 워크숍).

#### ○ 시각예술 분야 지원 방향 기조 전환

~에서	~으로
· 지원행정 전문가	· 시각예술 전문가, 비평가
· 미술활동 지원	· 창작 환경 전반(창작공간, 발표공간) 지원
· 주목받는 일부 작가 지원	· 생애주기별(신진, 중진, 원로작가) 지원
· 전시 지원	· 창작의 전 과정 지원(창작 이후 비평과 환류)

### 3) 개선과제

####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제도 운영

##### ○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원 풀 구축

- 시각예술 분야 심의위원 풀 확대(현장 중심, 동시대 예술비평 전문가 충원).
- 예술단체 혹은 기관 추천에 의한 심의위원 풀 제도 운영 제고.
- 심의-모니터링-평가 환류 등 일회적 심의에 한정하지 않는 심의시스템 마련.
- 책임심의제도에 준하는 전문가 심의위원 시스템 구축.

##### ○ 심사과정 및 심사 결과 공개

- 심의위원 공개 및 심의평 공개를 통한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 창작공간지원사업 등 목적 지원사업의 경우는 공개 심의제도 운영.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프로젝트 설명 기회 제공.
- 충실한 심사평 작성 공개를 통한 심사 결과의 적합성 제고.

#### ②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

##### ○ 지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지원하고 끝나는 지원제도가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체계 마련.
- 이를 위해서는 서울문화재단 내부에 시각예술 전문위원이 지원사업 파트에서 지속해서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여건 조성.
-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지원사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
- 지원사업 전문위원의 시각예술인 대상 상시적인 지원사업 컨설팅

혹은 상담제도 마련.

- 재단 직원 수 늘리고 이탈률을 줄여야. 인사이동 시에 이를 대체할 전문 인력 육성.

##### ○ 모니터링을 넘어서 비평시스템 구축

- 전문가 중심의 비평 환류체계 마련(사업 종료 후 비평 환류 워크숍 개최).
- 창작활동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비평 생산을 유통할 수 있는 저널 혹은 웹진 등의 지면을 통해 전문적인 창작활동에 관한 홍보 소개, 작가 인터뷰.

#### ③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설계

- 신규 지원사업 설계 시 작가, 기획자 등 현장전문가 자문 필수.
-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필요(6월 이후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 기간을 다음 해까지 유예하는 제도장치 마련).
- 청년예술단 지원사업과 같은 종합적이고 과정중심적인 지원시스템 설계.
- 변화하는 현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실험적인 지원사업 개발.

#### ④ 재단 내 창작공간과 유기적인 협력

-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력.
- 시각예술 공모지원사업에서 생성된 비평적 의제 중심으로 창작공간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유희공간을 활용한 민간 운영 창작공간에 관한 필요성 대두(시각예술 관계자 워크숍).
- 재단 운영 거점공간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제고(행정적 인사이동을 통해 전문가들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함).

-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업그레이드하고 보충하는 전략이 필요.

#### ⑤ 서울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미술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립미술관 <신진 미술인 지원사업>,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과 같은 미술지원사업과 협력 비평체계 강화.
- 서울시립미술관 <SeMA-하나 평론상> 신진 비평가 활용 비평체계 수립.

#### 4) 기대 효과

- ① 동시대 미술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사업체계 마련
- ② 청년세대 미술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심의제도 및 전문위원제도 운영
- ③ 동시대 미술 제도 기관(미술관, 아카데미)과 분리되지 않는 시각예술 지원제도 구축
- ④ 청년작가, 중견작가, 원로작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제도 운영

## 5-7. 다원·융합예술 분야

### 1) 현황

#### ①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지원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예술 영역의 확장에 기여하는 융·복합 예술활동 활성화, 장르 간 융합 및 통섭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예술창작활동지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음.
- 지원대상
  - 서울에서 발표되는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표현 활동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성향의 예술
  - 여러 장르의 특성이 융합된 복합장르 예술
  - 기타 예술의 다양성과 확장 가능성을 추구하는 예술활동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및 평론활동은 지원 불가하며, 단순 병렬형 장르 결합, 장르 간 단순협업 지양
- 지원 규모: 최소 500만 원~최고 3,000만 원

#### ② 세부사업 및 추진 현황

- 다원예술지원사업은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유망예술지원, 예술작품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성화지원 등 총 5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전체 지원사업 중 다원예술지원사업의 비중은 신청 건수 기준 6,903건 중 539건(7.81%), 지원금 결정액 기준 143억 원 중 12.3억 원(8.61%)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다원예술 총 539건의 신청사업 중 78건이 선정되어, 신청 대비 선정사업의 비율은 7.18%로 장르별 지원사업 중 가장 낮은

분포.

- 반면, 예술작품지원사업 기준 다원예술 분야 선정사업별 평균 지원금은 2,300만 원으로 연극 장르와 함께 가장 상위권에 위치.

## 2) 개선 방향

### ① 정책 연속성 및 타 지원기관과의 차별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정부 예술지원기관은 정치사회적 이유로 다원예술지원사업을 축소 운영 혹은 폐지하였으며, 지역 문화재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정책적 주목도가 점감하는 추세.
- 반면 서울문화재단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다원예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는 한편, 유망예술 및 청년예술 분야로 사업의 종류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새로운 창작 주체의 발굴, 예술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

### ② 다원예술의 개념 재정의

- 다원예술은 예술의 중심부에서 포착되지 못하는 새로운 예술활동 및 창작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되었으나, 초기 제도 도입 이후 정형화되어가고 있어 새로운 정책적 설계가 필요한 시점.
- 초창기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비주류예술,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예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
  - 현재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장르 간 융합 및 통섭,

융·복합예술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다원예술을 하나의 분야, 장르로 인식하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의 경향성을 현재적·근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하여 개방적이고 유동하는 정책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③ 다원예술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의 모호함
  -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단일 장르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선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유형
    -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장르별 지원사업이 미학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장르예술과 다원예술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고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신청 건수를 확대시키고 있음.
  - 다원예술의 본원적 의미와 관련성이 적은 사업들의 신청 및 선정기준
    - 단순한 장르 복합형 예술활동, 기술중심주의 맥락의 융·복합 예술, 소수적 문화산업으로서 대중예술과 기초예술의 경계에 있는 인디음악, 비보이 등의 예술활동.
  - 청년·신진 예술가 지원사업과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중복성
    - 타 분야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다원예술 분야도 예술가의 생애주기 및 창작 유형별로 내용적 고유성과 함께 구조적 다양성도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전반적 성격이 청년·신진 예술가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수용,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정체성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음.
- ④ 다원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심사 방식의 적절성

- 다원예술의 가치, 다원예술 현장의 변화 흐름과 다양한 경향성 등을 이해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원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구성 시 공연예술, 시각예술 각 장르별 전문가를 기계적으로 안배하여 운영하는 것의 한계.
- 서류심사 중심 다원예술 선정 방식의 문제
  - 다원예술의 특성상 지원사업의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신청 예술가의 미학적 태도, 예술활동의 기획 의도와 진정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서류심사만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분별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3) 개선과제

#### ① 다원예술의 개념 및 지원사업 정체성

- 근본적으로 다원예술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들은 예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다원적 태도, 하나의 전형으로서 기존 예술의 일원성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예술적 형식과 내용의 다원성이어야 할 것임.
  - 다원예술이 새로운 예술적 가치, 형식과 내용의 실험적 발견을 지향하고 있다면, 다원예술은 일종의 ‘다가올 예술’로서 구체적으로 지시되는 사전적 정의보다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다원예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한 장르 간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예술, 비보이, 인디음악 등 지원사업 분류체계의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는 유사 다원예술과 다원예술의 변별 기준은 명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다원예술의 다원성: 예술가의 미학적 태도, 예술적 형식과 내용의 실험성

- (기존 예술의 장르와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창작활동, 새로운 예술 형식과 내용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적 창작활동.

#### ○ 다원예술지원사업의 대표성과 특성화

- 중앙정부,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서울 지역은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인적·물적 요소가 갖춰져 있으며,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
-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예술창작 주체를 발굴하고, 예술의 실험성과 혁신성을 지향하는 다원예술지원사업의 정책적 주목도를 높이고 사업 특성화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② 플랫폼 기반 지원체계와 지원사업 구조의 다양성

##### ○ 플랫폼 기반, 과정중심적·협업형 지원체계

- 다원예술은 예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워크숍 방법론이 수반되는 과정중심적 창작활동이며, 시간과 공간 활용에 대한 비확정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한 분야임.
-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원예술 창작 활성화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핵심적 지원수단은 다원예술을 구성하는 다양한 활동과 자원들을 매개해줄 수 있는 공공 부문의 플랫폼 조성, 민간 부문 다원예술 플랫폼 운영지원 등 플랫폼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 다원예술지원사업 구조의 다양성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방식

- 단계별 지원 및 사업 간 연계성 강화: 청년예술지원 및

## 유망예술지원

다원예술 세부 지원사업 중 입문, 예술 경력 형성 단계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지원, 유망예술지원 사업의 경우 현행 창작준비형, 창작발표형 지원 모델을 유지하되 정보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전반적으로 협업적 환경, 단계별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

- 더불어, 예술적 경험의 축적 및 예술 경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해당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유망예술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다년간 지원 및 수월성 중심: 예술작품지원  
반면 예술작품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예술적 성과, 예술활동 경력이 입증된 예술가들이 다원예술의 질적 수월성과 실험적 다양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사업별 평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주어야 할 것임.

## ③ 심사 방식 개선 및 다원예술 비평 활성화

-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 서면 심의보다 인터뷰 심의 등 심층 심의 중심 심사 방식 개선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장르별 전문가의 기계적 배분보다는 심사위원 간 신청 예술가, 사업에 대해 다각적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접근.
  - 장기적으로는 다원예술 분야의 전문가 발굴 및 체계적 이력 관리도 동시에 고민해야 함.
- 다원예술 비평 활성화
  -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 현황, 흐름과 경향성 등을 파악하고 다원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원예술 비평 활성화 필요.

-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원예술 비평 네트워크, 매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다원예술 비평 활성화를 위한 매개 및 지원 프로그램 도입.

## 5-8. 청년 분야

### 1) 현황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기존 예술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인의 창작 환경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술창작활동 기회 및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재단에서 실행되어왔음. 본 지원제도는 기존의 유망예술사업과는 다르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예술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청년예술 분야 지원정책의 경우, 2016년 최초예술지원사업 (비기너스 프로젝트)이 선을 보인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변화를 가져옴. 이러한 변화는 지원 범위 및 운영 방식 다각화, 지원 규모(예산) 대폭 확대, 예술가의 창작주기를 고려한 지원 기간 재설정, 재단 보유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확장 등으로 나타남. 특히, 다년도 트랙의 신설, 과정지원의 도입, 공간지원형 사업 등의 변화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으로 나타난 사례임.
- 현재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 분야 지원사업은 기존 공모형 사업인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과 2019년부터 실행되는 신규 기획형 사업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지원 등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기존 공모형 사업 중 최초예술지원의 경우 창작준비형과 창작발표형으로 구분되며, 창작발표형의 경우 단년과 다년(2년) 트랙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음. 서울청년예술단의 경우 단년과 다년(2년) 트랙으로 구성되어 연속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음. 청년예술공간지원의 경우 공간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발표공간제공형과 공간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체기획형 파트(단년)로 구분됨.

- 기존 공모형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사업 간 필요에 따라 기반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아래의 표 참고).

구분	내용
멘토링	- 사전조사: 지원신청 시 멘토링 희망 여부 등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 신청 접수: 선정 이후 멘토링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신청 접수 및 멘토:멘티 매칭
발표공간	- 선정된 청년예술공간과 연계 시 대관료 50% 이상 할인 제공
네트워킹 및 워크숍	- 선정된 서울청년예술단 대상 <활동공유 워크숍> 격월간 진행(전 장르)
청년 예술포럼	- 청년예술인 당사자의 정책 의견 제언 및 상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청년예술포럼 진행
연구·조사	- 운영 3년차에 따라 장기 비전을 갖춘 <청년예술지원체계> 구축 연구 준비
홍보	- 선정자 발표 작품 통합 홍보(재단 보유 다양한 매체 활용_홈페이지, SNS, 웹진 등) - 재단의 청년크리에이터(홍보팀 주관)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의 작품 활동 및 발표에 대한 아카이빙 및 집중 홍보 진행

- 2018년 청년예술지원 총 신청 건수는 3,494건으로 전년(2,952건)에 비해 18% 상승함. 총 1,087명이 지원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됨(아래의 표 참고).

연번	세부사업명	신청 건수	선정 건수	선정률 (%)	지원 규모 (천원)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달성률
		* 건수 기준				* 인원수 기준		
1	최초예술지원(1차)	1,518건	266건	17.5%	1,519,200	255명	266명	104%
	최초예술지원(2차)	1,306건	190건	14.5%	1,162,918	170명	190명	112%
	계	2,824건	456건	16.1%	2,682,118	425명	456명	107%
2	서울청년예술단	574건	58건	10.1%	2,400,600	-	-	-
		(2,793명)	-	-	-	250명	281명	-
	계	574건	58건	10.1%	2,400,600	250명	281명	112%
3	청년예술공간지원	96건	35건	36.5%	863,000	-	-	-
		-	-	-	-	325명	350명	-
	계	96건	35건	36.5%	863,000	325명	350명	108%
총계		3,494건	549건	15.7%	5,945,718	1,000명	1,087명	109%



- 2019년도부터 실행된 신규 기획형 사업의 경우, 지역, 사회, 창작공간, 기업 등과 연계한 보다 확장된 형태의 예술활동 지원, 포괄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기획형/수시형 지원 도입, 재단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 유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특성화/고도화된 서울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아래의 표 참고).

사업 구분	내용	관련 전문 영역	연계 관련 부서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공간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상주형 청년예술인 그룹 구성</li> <li>- 구성 방법은 공모, 추천, 자체 구성 등 공간별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개별 수립</li> <li>- 각 창작공간과 상주형 청년예술가 그룹은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역할</li> </ul>	기존 보유 창작공간 인프라 기반 영역	예술창작본부 연희문화창작촌 외
			지역문화본부 삼일로창고극장 외
			공간기획본부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서울예술치유허브 외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예술인 그룹이 지역 또는 사회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환경적 기반 제공</li> <li>- 청년예술인들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지역 내 다양한 파트너 매칭 지원(지역 문화기획자, 지역 문화공간, 자치구 문화재단, 로컬 비즈니스 기업 등)</li> </ul>	지역 및 사회 이슈 관련 영역	지역문화본부 문화기획팀 외
청년 크리에이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이 보유한 홍보 매체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예술인의 예술 기반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집중 홍보하는 ‘청년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li> <li>- 공모형/기획형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결과물(공연, 전시 등)과 관련하여, 홍보 가능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진행</li> </ul>	홍보 관련 매체 기반 영역	제휴협력실 홍보팀 외
제휴·매칭형 청년예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이 보유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소소한 기부 등)을 확대하여 청년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을 위한 대안적 지원 기반 마련</li> <li>- 상호 필요충족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단체/기업과 청년예술인 간 매칭을 통해 청년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li> </ul>	제휴, 기부, 민간 자원 매칭 관련 영역	제휴협력실 메세나팀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청년예술가에게 새로운 예술창작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예술가는 이를 통해 예술과 공공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인식하게 됨. 경험이 적은 참여자의 경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안전하게 겪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학습’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생겨남. 즉 지원의 당사자인 청년예술가는 본 사업을 경험적 자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
-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실행과정 등을 통해 기존의 창작지원정책이 되비취짐으로써, 기성 예술계의 관행과 맹점이 드러나는 현상이 발생. 앞으로 지원정책 설계에 있어서 청년예술정책을 참고하는 역방향적 발상이 가능해짐.

## 2) 개선 방향

### ① 청년예술에 대한 인식 및 접근에 대한 재고찰

- 생애주기별 지원의 타당성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청년’의 범주에 대한 정교한 정의가 요구됨.
- “청년은 누구인가?”(대상과 범주), “청년은 왜 청년인가?”(청년성),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어떤 존재인가?”(존재성), “청년예술가는 왜 지원의 대상인가”(지원의 타당성), “최초 예술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최초성) 등의 질문에 대한 지원기관과 청년예술가 사이에 합의된 공통의 상(像) 필요.
- ‘청년+예술’의 가능성, 존재성에 입각하여 제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청년예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춰야 함. 기존의 청년예술은 청년 스스로가 원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에 입각해 만들어진 도구적 용어임. 따라서 청년의 당사자적·주체적 의미의 개념 설정이 요구됨.

### ② 청년예술가의 주체성과 특수성이 보장되는 사업 설계

-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최초 설계 단계에서 청년예술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지원사업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년예술가의 의견이 주체적으로 수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기본적으로 청년예술가가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청년예술의 활동 전반에 있어 초기 기획 부분에 대한 촘촘한 설계가 오히려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범위와 방향을 제한하는 경우 발생. 따라서 청년예술가들이 자발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청년예술 또는 그 지원제도에 대한 의제 발굴(연구, 비평 그룹) - 매개 방식 개발(기획자 그룹) - 다양한 창작실험(창작자 그룹) - 피드백, 아카이브(관객, 비평, 창작) 과정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방식을 '예술작품창작'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함.
- 동시대 청년/예술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 중시, 과정 중시, 협업 중시, 장르 간 장벽 철폐, 공정하고 평등한 제작 관행, 예술가의 윤리의식 등이 고려된 사업 설계가 강하게 요청됨.

### ③최초성을 고려한 사업의 충분한 유연성 필요

- 청년예술가의 새로운 창작 방식과 변화하는 예술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요건이나 추진 절차가 좀 더 유연하고 연계 프로그램의 지원이 긴밀할 필요가 있음.
- 청년예술가의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은 사업 실행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전제 조건임. 이를테면, 사업 기간을 늘려 제작물 발표 시기가 분산될 수 있게 사업 수행 시기 조정이 필요함.

### ④기존 '지원'사업의 의미 고찰 및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

- 예술가의 수월성, 전문성을 인정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프레임과 이를 벗어나려는 청년예술가의 인식 차이 발생.
- 사업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단계별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며, 상호 피드백을 나누기 원하는 세대적 특성 발생.
- 심사, 현장평가, 사후 모니터링(리뷰, 크리틱) 등의 단계에서 청년예술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소통을 강력하게 요구함. 모든 참여자가 현장평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모, 심사, 평가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원자-평가자' 등의 일방적인 관계 설정이 아닌, 평등하고 쌍방향적인 소통관계 설정 요구.
- 기존의 장르별 지원 방식보다는 이슈별, 테마별 창작지원이라는 새로운 지원트랙의 가능성 도출. 청년지원사업 내에 세부화, 다각화된 프로그램 필요.

### 3) 개선과제

#### ①청년의 조건과 범위를 확대하는 범청년예술정책 수립:

서울청년예술가에 대한 재정의

- 나이, 세대, 국적, 전문성 등의 개념을 넘어서는 화두로서의 '청년+예술'에 대한 인식.
- 자기계발형 예술가, 플랫폼구축형 예술가, 장르심화형 예술가, 다원지향 예술가 등 당사자 이슈에 입각한 지원제도 마련.
- 서울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에 대한 존재성 인정, 해외 국적 서울 거주 청년예술활동가에 대한 자격 인정 및 지원의 범주에 해당하는 예술가 범위 확대.

②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개방적 구조 마련: 청년예술위원회 설치

- 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참여 가능한 지점에서 청년예술가의 직접 운영(기획, 심사, 모니터링, 평가 등).
- 비전문성, 비경험성 등을 만회하는 ‘집단지성’, ‘자발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수행적 제도 마련.
- 자기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기획자, 창작자, 연구비평가 등 지향성을 가진 제도 참여 등. 예를 들어, 예술지원사업 공동운영단, 거버넌스사업 추진단, 청년예술정책 공동연구단, 예술노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참여 조직과 루트 마련.

③ 시작하는 청년예술가를 위한 충분한 조건: ‘실패를 위한’ 시간, 기회의 보장

- 단년간 사업 수행에 따른 특정한 시기 작업 종료가 아닌, 충분한 사업 수행의 기간 부여.
- 일부 참여자는 사업 발표를 당해 연도에 한 후, 사업 수행은 차기 연도에 할 수 있게 해서 대상자 선정과 사업 진행의 시간차를 줘서 분야별 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여건 제공.
- 경력 없는 최초 예술가를 위한 사후평가제도 적용 및 다년간 지원트랙 활성화.

④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채널: 접근 용이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의 이해를 돕는 공식적인 가이드와 매뉴얼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 소개와 가이드를 담은 상세한 매뉴얼 상시 제공. 사업 수행 기간과 제작 과정의 이해를 돕는 프로토콜을 제시해주거나 참여자가 범하기 쉬운 시행착오나 문제 유형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사업 기간 중반 이후 정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워크숍이 필요함. 사업 초반 참여자 스스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사업 중반 이후에 가서야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궁금한 내용이 생길 때,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함.

⑤ ‘과정’을 위한 소통 채널 및 모니터링 제도: ‘소통-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구축

- 심사, 현장평가, 사후 모니터링(리뷰, 크리틱)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식적 (소통) 기구 마련. 예) 예술가-행정가-평가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 모든 참여자가 현장평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질문-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심사자, 평가자 등을 청년예술가들이 추천하고 선정하는 청년예술가 평가위원 풀 마련.
- 제도 내에서의 소통이 잘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는 과정평가, 메타평가 등을 수행하는 당사자 중심의 전문 모니터링 그룹 마련.

⑥ 예산 집행 규정 및 행정의 간소화: 예술가에 의한, 예술가를 위한 방식으로 재설계

- 불필요한 행정절차 삭제 및 철폐.
- 청년의 특성을 살린 업무 간편화, 간소화 등 직관적이고 실질적인 처리 방식 채택.
- 지원신청, 작업 공유, 평가 및 환류 등에 있어서 접근이 쉽고 친근한 운용시스템 도입.

⑦ 홍보·마케팅 정보 지원→통합 홍보 채널 제공

- 홍보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재단의 다각도 지원과 협조.
-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여 참여자 간의 정보 교류뿐 아니라 재단과 참여자 간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
- 홍보·마케팅에 특화된 청년예술단체 선정 및 운용: 청년예술가 크리에이터 지원사업(2019년도 실행) 활성화 및 보완.

⑧ 네트워킹, 공간 매칭, 제휴 등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

- 효과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실시. 청년예술가가 원하는 네트워킹 방식으로 경험치를 높이는 프로그램 마련(장르별, 이슈별, 의제별, 지역별 등등).
- 네트워킹 및 공간 매칭에 특화된 청년예술단체 선정 및 운용: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2017년도 실행)의 활성화 및 보완.

⑨ 동료의식을 나누는 소통, 교류, 정보의 경험 필요

- 서로 간의 작업을 봐줄 수 있는 기회 및 구조 마련.
- 당해 연도 사업 탈락자에 대한 인식 및 모니터링: '낙선자포럼' 개최.
-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도 바깥에 있는 청년예술가에 대한 분석 및 조사.

⑩ 상시적·전문적 조력자 그룹: 협력형 중간 매개 그룹 지원

- 예술현장에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는 최초 참여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조언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창구 마련.
- 공공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예술가의 책무, 예술계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인식체계를 전해줄 전문가 그룹, 청년예술가의 작품활동 및 예술미학에 대한 분석, 예술적 성과를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협력 그룹 필요.

- 프로듀싱, 기획, 홍보, 섭외, 제작 과정이나 정산 등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의 조력자 그룹 마련.

⑪ 청년예술가의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구상안 마련

- 서울청년예술가에 대한 상상력 공유.
- 청년예술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르별·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청년예술가의 예술적·정성적 성과를 담아내는 '특별한' 지표 설정.

4) 기대 효과

①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개방적 구조 마련

- 예술가와 공공의 상호합의, 공동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 가능.

② 창작활동의 진입과 지속이 가능한 창작지원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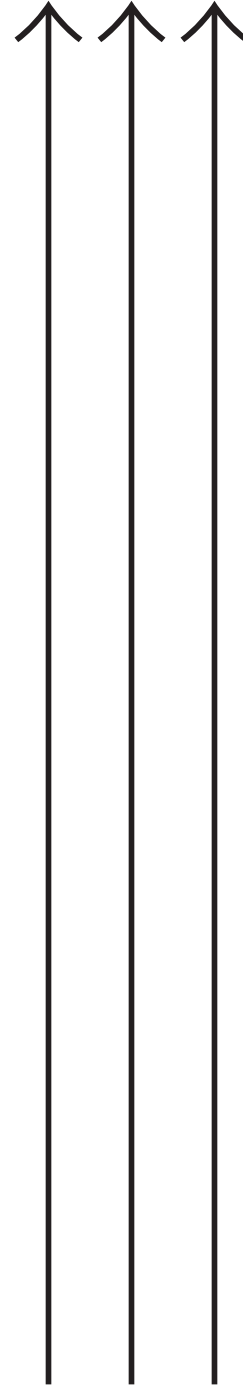
- 청년세대 이후의 예술활동에 대한 체계 준비.

③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

- 세대별 지원사업에 대한 설계 시 참고 가능.

④ 예술지원사업 고도화에 따른 행정업무 간소화를 실험

- 새로운 세대/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원체계 구상.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

교열	류현영
디자인	포물러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김대일)
발행일	2019년 12월